

서민의 금융사다리가 필요합니다.

- 국정감사를 통해 돌아본 금융정책 -

2018년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 국회정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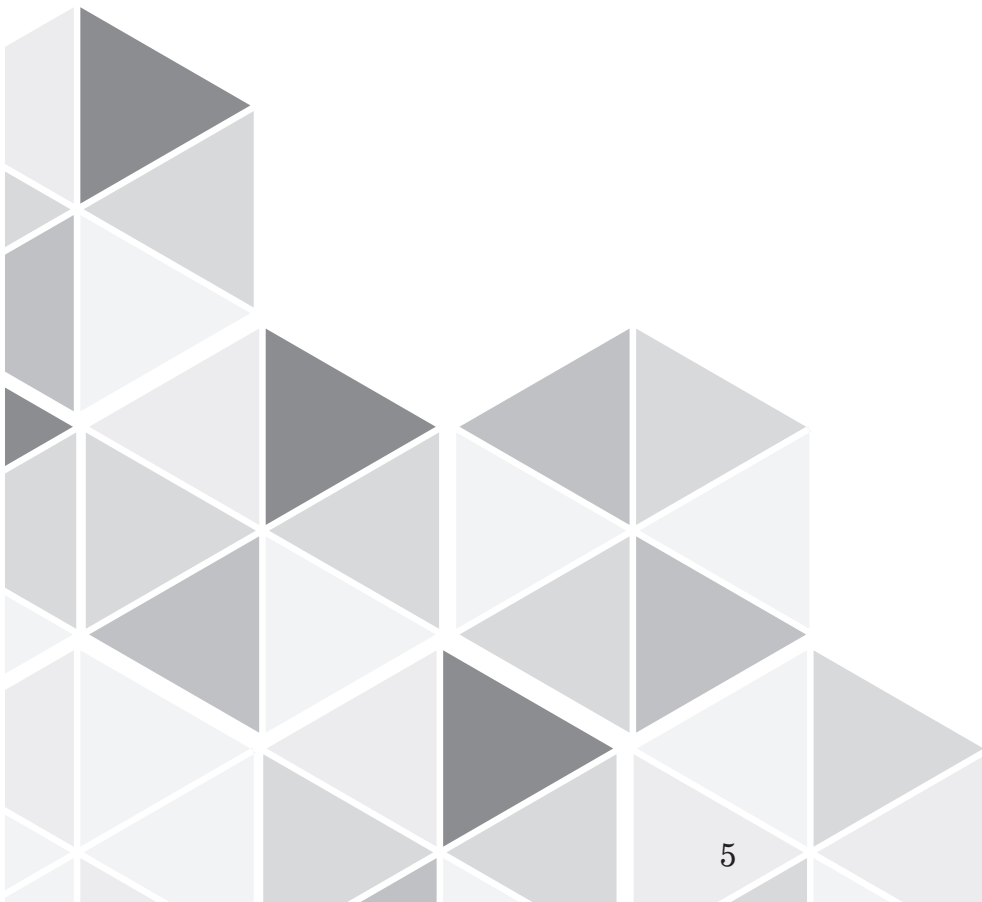
목 차

국정감사	5
1. 국무조정실	9
2. 금융위원회	29
3. 금융감독원	73
4. 한국자산관리공사	101
5. 서민금융진흥원	141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 · 세월호 참사 특조위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리 휘어지는데, 금리인상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5만원, 금리 1%인상 시 360만원 추가부담

-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10.9%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중고를 겪을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변동금리 부채를 진 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원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122만원 늘어난다. 즉, 연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근로자)1인 기준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또한, 5인 기준 연간 1,025만원 추가 부담된다.
- 최저임금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 금리의 인상이다. 자영업자의 대출자는 총 160.2만명으로 2017년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549.2조 원이었으나 2018년 6월 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90.7조원으로 1년 사이에만 무려 41조원 급증을 하였다.
- 만약 금리인상이 1%포인트 상승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이는 자영업자 1사람 당 36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즉, 금리 1% 인상을 할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과 가계대출의 부담까지 추가되어 1인기준 사업장의 경우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 추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 성일종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원 중 40%에 달하는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부채가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중 30% 정도는 고금리 대출인 것으로 알려져 금리 인상 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특별 T/F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질의서 자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일종**



1

살인 부르는 불법사채시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무조정실)

2

□ 옥천 네모녀 사건을 기억하는가?

(사건 배경)

- 수 억 원의 빚 때문에 사채를 끌어 쓰는 등 악순환의 연속으로 집에서 **아내와 딸 3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



3

□ 불법사채시장의 규모

- 한국갤럽이 '1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법사채 이용자는 **110%이상 고금리**로 약 3,000만원 ~ 5,000만원의 대출액을 이용
- (20세이상 성인인구로 환산)시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이용자 약 30 ~ 40만명, 이용총액 **약 10조 ~ 24조**로 추정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및 규모 추정

	2015년	2016년
이용총액 (추정)	10조5897억원	24조1144억원
1인당 평균 이용 총액	3209만원	5608만원
이용자 수 (추정)	33만명	43만명
연이자율	114.58%	110.88%

자료: 한국갤럽

4

< 불법사채 이용 규모 추정 >

구분		2015년	2016년	변동(률)	
조사결과	1인당 이용 총액(만원)	3,209	5,608	2,399(74.8%)	
	1인당 이용 금액(만원)	2,162	3,159	997(46.1%)	
	연이자율 (월이자율)	114.58% (9.54%)	110.88% (9.24%)	△3.70%p (△0.30%p)	
	이용목적	사업자금	42.9%	48.8%	5.9%p
		가계생활 자금	35.9%	36.1%	0.2%p
		타대출금 상환	25.2%	10.2%	△15%p
쇼핑 및 오락		5.9%	7.1%	1.2%p	
기타	5.4%	7.0%	1.6%p		
이용 규모 추정	20세 이상 성인인구 (만 명)	3,984	4,050	20세 이상 성인 인구 환산시 이용 규모	
	이용자 수 (만 명)	33	43		
	이용 총액 (억 원)	105,897	241,144		
	이용 금액 (억 원)	86,196	135,837		

* (사)서민금융연구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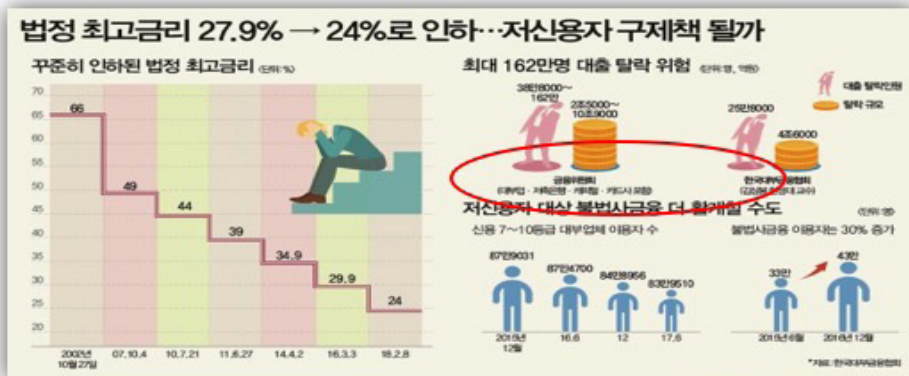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이탈(배제) 현황

(한성대 김상보 교수) 연구자료

☞ 최고금리가 27.9% 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저신용자 52.3만 명**이 금융권에서 배제

(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위원) 분석자료

☞ 최고금리 20% 인하 시, **최대 86만 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에서 배제 추정



6

☐ **법정최고금리 관련 대통령 공약**

- '임기 내 법정최고금리 **20%** 까지 인하'

공약이행에 따라 24%였던 최고금리가 **올해 2월부터 24%까지 인하** 되었는데, 시행 이후 시장의 변화는 살펴보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서민금융' 공약 일부

대출 금리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27.9%→25%
	▷임기중 최고 금리 20% 까지 일원화
채무 정리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1.6조 채무 정리
	▷죽은채권' 시효 경과 사실 고지, 상황 중용 방지
카드수수료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2억원→3억원, 3억원 →5억원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연 매출 2억원 이하(0.8%)는 점진적 인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1.3%→1.0%로 인하



7

☐ **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

- 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8. 06. 29)

"최고금리 인하('16.3월~, 34.9% →27.9%)가 시장 전반적인 영업 위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 잔액(조원)	: ('15.12말) 13.2 → ('16.12말) 14.6 → ('17.12말) 16.5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 ('15.12말) 11.7 → ('16.12말) 12.8 → ('17.12말) 14.2
자산 100억원미만 법인	: ('15.12말) 0.8 → ('16.12말) 1.1 → ('17.12말) 1.5
개인	: ('15.12말) 0.6 → ('16.12말) 0.7 → ('17.12말) 0.7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금융감독원
	보도 '18.6.29일(금) 조간	배포	'18.6.28.(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 (2100-2610)	담 당 자	홍 상 준 사무관 (2100-2612)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 동 공 (3145-7550)		전 광 준 대부업감독팀장 (3145-7435)	

제 목 : '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8

금융당국은 오히려 총액 증가로 대출 증가세가 높아 수익성에 의존한 대부업체의 불건전한 대출 권유 실태를 문제로 인식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까다로워진 대부업 심사로 인해 대부업에서 조차 외면 받은 이용자들을 어느 곳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봄

9

☐ 대부업 이용자 실태

- 실제로 법정이자율이 **24%로 인하** 된지(18.2) 5개월 만에 전년(17년) 동기 대비
 - 대부업체 고신용자(1~6등급) 신규 신용대출자는 **12.0%(26,551명) 감소**에 그친 반면,
 -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에는 **22.7%(70,808명)가 감소**

“고신용자 보다 2배 가까이 급감”

이는 상반기 규모로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연간 14만 명 이상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짐.

☞ 이는 최고금리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의 장애로 작용** 하고 있다는 것임.

10

<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

구분 (단위 :명)	17년 上 (1~6월)	비중(%)	18년 上 (1~6월)	비중(%)	증감	증감율(%)
1~6등급	220,536	41.4	193,985	44.6	-26,551	-12.0
7~10등급	312,007	58.6	241,199	55.4	-70,808	-22.7
합계	532,545	100.0	435,184	100.0	-97,361	-18.3%

*자료: NICE 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제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저신용자 신규대출자 수가 **24.1만 명** 인데,
18년도 대출 승인율(저신용자) 12.8%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신청자 수는 188.4만명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 **대부업 대출도 거절된 160만 여명은 과연 어느 곳으로 가서 '돈'을 구했겠는가?**

1
1

☐ 불법사채 피해 규모 증가세 (문재인 정부 피해 최대)

- 정부의 불법사채 단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의 불법사채피해 민원 및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 불법사채피해 민원건수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8월
사채업자 수(명)	262	310	622	372
대출원금(억 원)	147	76	521	202

* 자료 : 대부협회

1
2

< 미등록 대부업 신고 현황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미등록대부 (불법사채)	619	983	1152	1,220	2,306	2,818
(전년비증감률)		(58.8)	(17.2)	(5.9)	(89.0)	(22.2)

< 불법사채피해 민원건수 >

구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검거건수	979	1,038	59	6.0%	1,331	293	28.2%
검거인원	2,016	2,227	211	10.5%	2,931	704	31.6%

1
3

진단을 잘 해야 처방도 잘 할 수 있는데,
진단도 없이 처방을 하는데 신통한 방법이 있겠는가?

☞ 정부차원 사금융피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검경,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행자부** 등이 참여하는 **법 정부형태의 총리실에 특별 T/F** 등을 상시 설치 운영 필요하다고 봄.

1
4

자영업자의 한숨은 끝이 없다 (국무조정실)

15

□ 자영업자 대출 규모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 '2018년 9월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 7,000억 원**
- 2014년엔 372조 3,000억 원에 그쳤으나 3년 반 사이 **200조원 넘게 늘었음**



한국경제 18.9.21

1
6

□ 자영업자 대출(고금리 이용 실태)

- 전체 자영업 대출의 **31%(183조원)**가 저축은행 등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연체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 자영업자 대출 연체 현황

- 2018년 6월 기준, **국내 은행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29%**

▲ 일반 가계대출 **0.25%**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0.64%**

1
7

통계로 보면 자영업자 연체율의 경우 일반 가계대출 보다는 높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보다는 낮은 수준임.

통계로 보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연체율이 낮고 대출금액 비중이
높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면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1
8

□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모 급증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18.3.21) 가계부채점검회의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하거나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방침" 밝혀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 549.2조원이었는데,
발표 이후 6월말 기준 590.7조원으로 **41조원 급증 함.**

1
9

□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

※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1%p 인상 시** 변동금리 부채를 진 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원 증가

자영업자의 증가 폭은 **122만원 늘어나** 부담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음.

2
0

□ 금리인상 압박 주체가 바로 정부

<총리와 장관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답변>

1)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

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 “**금리(인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2
1

□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부담 가중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19년도 최저임금 기준)

*사업자, 근로자 1인 기준 **월 17만원, 연간 205만원** 인건비 추가 부담

- **(5인기준)** 연간 1,025만원 추가 부담

- 금리 1% 인상 시 자영업자 이자지급액 추가 부담 122만원 추가 부담


☞ 최저임금 추가 부담 **(1인기준)** 205만원, **금리 1% 인상 시 122만원 추가 부담**

- (1인기준) **327만원 추가 부담**

- (5인기준) **1147만원 추가 부담**



22



미투운동, 주 52시간제 도입 등 회식문화 위축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데, 대책은커녕 금리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의 걱정만 주고 있는 실정임.

- 내용 없고 생색만 내는 고용안정자금, 카드사 팔 비틀어 10년 동안 11번에 거친 수수료 인하, 정착 장담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페이 등
- 유명무실한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음.
- 카드 활성화로 1999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20조원** 에서 2016년 **69조원** 으로 **3.5배(245%)나 증가** 된 세수 활용해야 함.
- 현재자영업자 지원대책 방안으로 제시된 700만원의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봄.



대표언론자료



세계일보 주소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10004539>

특 인 쇄

최저임금·금리 인상 '이중고'...'자영업자 리스크 대비해야'[뉴스 투데이]

시급 10.9%올라 연간 205만원 증가/금리 1%p만 올라도 이자 360만원 ↑/가계대출 채무자 1인당 빚 8043만원 /빚내서
집 산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



내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1인당 부담액이 560만원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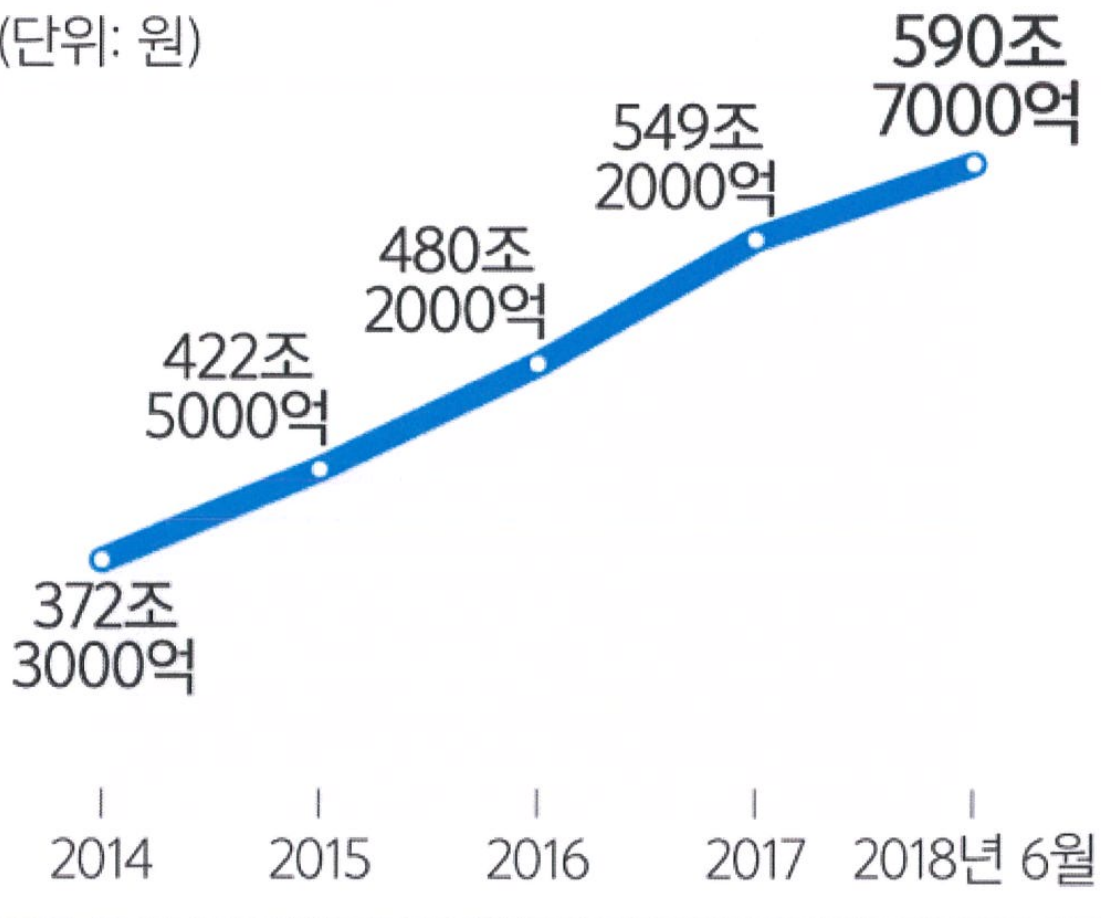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약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5인 사업장은 연간 1025만원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돼 이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올해 157만3770원보다 월 17만1380원이 많아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더해 대출금리 인상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를 3회 정도 올릴 태세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590조7000억원으로, 2017년 말(549조2000억원)보다 41조5000억원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원이 넘는다.

자영업자 대출잔액 추이

(단위: 원)



자료: 한국은행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간 5조9000억원 늘어난다. 자영업자 1인당 약 360만원꼴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금리 1%포인트 인상분을 더하면 자영업자 1인당 연간 56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30%는 고금리 대출”이라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산하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당 가계부채는 8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채무자는 1903만명, 총부채액은 1531조원이다. 1인당 804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총액은 77조원, 1인당 부채는 260만원 증가했다.



서울 중구 서울중앙시장의 중고 주방용품 상점에 폐업한 음식점에서 사들인 중고 주방용품들이 잔뜩 쌓여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인당 가계부채 비교 (6월 기준)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나이스평가정보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741조원으로 48.4%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31만명 중 502만명(79.5%)은 1주택자이고, 나머지 129만명(20.5%)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빚을 내 주택을 산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4명 중 1명(23.1%)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는 주로 신용대출(79.2%·이하 중복 포함)이나 카드론(40.8%) 이용이 많았으며, 대부업대출(8%)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6.6%)도 있었다. 다중채무자의 부채총액은 3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원(6.9%) 늘었다.

김 의원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중채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유동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jjin@segve.com

2018-10-10 18:29:19

세계일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COPYRIGHT © 세계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누구를 위한 서민금융인가?

- 저신용자(7~10등급) 10명 9명 대부업체에서도 외면, 승인율 13.4%
- 등록 대부업체 지난 10년 동안 절 45.3% 감소
- 특히 개인 대부업체 59.1% 급감하며 대부업체 음성화 가속
- 18년 상반기에만 160만여명 대부업체 대출 거절, 이후 어디로 갔는가?
-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은 단 한 푼도 없어
- 대기업, 은행 팔 비틀고 휴면예금·채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호주머니로
재원 삼으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는 한심한 나라
-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절벽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금융주치의 제도를 신설,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 최근 경기 침체에 더해 법정이자율이 인하되며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이용 실태’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이 2014년 26.9%에서 2018년(상반기) 12.8%로 5년 만에 52.4% 감소하며 신청자 10명 중 9명이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0등급 대부업 대출 승인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상반기)
7~10등급	26.9%	21.3%	16.4%	16.2%	12.8%

*자료: NICE 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제출

- 특히 법정이자율이 24%로 인하 된지(18.2) 5개월만에 전년(17년) 동기 대비 대부업체 고신용자(1~6등급) 신규 신용대출자는 12.0%(26,551명) 감소에 그친 반면,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에는 22.7%(70,808명)가 줄어들어 고신용자 보다 2배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규모로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연간 14만 명 이상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진다.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구분 (단위 :명)	17년 上 (1~6월)	비중(%)	18년 上 (1~6월)	비중(%)	증감	증감율(%)
1~6등급	220,536	41.4	193,985	44.6	-26,551	-12.0
7~10등급	312,007	58.6	241,199	55.4	-70,808	-22.7
합계	532,545	100.0	435,184	100.0	-97,361	-18.3%

*자료: NICE 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제출

- 아울러 등록 대부업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07년 등록 대부업체는 14,783개에 달했지만 2017년 8,084개로 줄어들며 10년 동안 4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대부업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같은 기간 59.1%(2009년 13,432개, 2017년 5,491개)가 줄어들었다.

〈등록 대부업체 수 추이〉

구분	2009.12	2013.12	2017.12
등록업체수	14,783	9,326	8,084
(개인업체)	(13,432)	(7,620)	(5,491)

*자료: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등록수가 급감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2018년도 상반기 승인율(12.8%)을 감안하면 거절률(87.2%)에 해당하는 160만 여명(다중채무 감안 최소 40만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유인이 큰 만큼 이들을 추적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8등급 이하 신용자의 비중은 9.2%에 불과한 것이다. 7등급(30.4%)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고신용자(1~6등급)의 비중(60.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등급별 서민금융상품 공급 비중〉

구분	1~6등급	7등급	8~10등급
비중	60.4%	30.4%	9.2%

*자료: (사)서민금융연구원, 서민금융연구원 출범 기념 포럼 자료집

- 특히 서민금융상품은 2017년 말까지 37.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 정부가 운용중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예산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로 4대 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은 기업·은행기부금과 휴면예금 이자수익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지자체, 금융회사 출연금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회수금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 구성〉

상품		재원	현황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기업·은행기부금	기업의 잔여 기부금 납입을 위해 협의 필요
	지역법인	일반 기부금	사실상 종료
	민간사업수행기관	휴면예금 이자수익	휴면예금 출연규모 감소
햇살론	근로자햇살론	복권기금 금융회사 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복권기금 출연 종료 도래 •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적(한도 9,000억원)
	사업자햇살론	복권기금, 지자체·금융회사 출연금	1차 사업의 잔여재원으로 운영 중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회수금	자금유입 제한적
새희망홀씨		은행 자체 재원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 협의

*자료: (사)서민금융연구원, 서민금융연구원 출범 기념 포럼 자료집

- 지난 해 11월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역시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폭염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며 가계부채 증가폭이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 시장 위축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 대책의 일환인 4대 서민금융상품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떠들썩하게 홍보 했는데 알고 보니 기업과 금융회사 팔을 비틀어 모은 출연금과 휴면계좌, 재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들 호주머니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고 정부는 서민금융과 빚 탕감 대책에 예산 한 푼 안들이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성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 치적 쌓기에 서민을 이용하지 말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신용자가 정부의 서민금융상품과 대부업체에게 외면당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는 실태조사에 나서고 위험군 관리를 위한 금융주치의 제도로 신설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베이비 붐 세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급증...금감원은 불구경 중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이스피싱 1건 당 피해액은 평균 5백만 원
- 여성 피해 금액 증가율 5년간 111% 증가
- 베이비붐 세대인 50~59세 중장년층 피해 금액 5년간 352% 증가... 주의 당부!

- 최근까지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없애겠다며 갖가지 정책을 내보였다. 과거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금융당국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 현재까지 ▲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 건수는 99,049건, ▲대출빙자형 피해건수는 175,955건으로 두 건의 피해액은 총 1조 2186억 8000만원 육박했다. 한 건의 피해금액 당 약 443만 1499 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한 셈이다.
- 연도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1건당 피해액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무려 581만 4,944원으로 5년간 통계치 중 가장 많은 피해액을 보여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424만 2,817원 ▲2014년 387만 1,553원 ▲2015년 423만 6,866원
 ▲2016년 418만 8,846원 ▲2017년 485만 9,936원 ▲2018년 상반기 581만 4944원

- 특히,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다수 지역의 경우 전체 피해금액의 7% 내외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반면,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서만 전체 피해금액인 1조 2186억8000만원 중 ▲경기도 3065억 8700만원 (25.15%), ▲서울특별시 2905억 4700만원 (23.84%) 으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약 49% 가량이 확인되었다.

- 성별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경우 남성, 여성, 전체 다수인 기업 등 모두 2013년부터 2017년 피해금액 증가율이 각각 ▲181.07%, ▲111.08%, ▲2531.93%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상반기까지 각각 ▲110%, ▲56%, ▲1704%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작년의 증가율을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남성 ▲2013년 426억 9000만원 ▲2014년 1173억 8600만원
▲2015년 1070억 2900만원 ▲2016년 991억 4500만원
▲2017년 1199억 8900만원 ▲2018년 상반기 895억 5700만원
- 여성 ▲2013년 562억 3500만원 ▲2014년 1398억 2200만원
▲2015년 1354억 1900만원 ▲2016년 902억 3100만원
▲2017년 1187억 200만원 ▲2018년 상반기 876억 8900만원
- 기업 ▲2013년 1억 6600만원 ▲2014년 22억 7800만원
▲2015년 19억 9800만원 ▲2016년 29억 8000만원
▲2017년 43억 6900만원 ▲2018년 상반기 29억 9400만원

- 연령별 피해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들어났다. 2017년까지 피해금액은 1조 원이 넘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무려 50% 가까이 육박 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5년간 중장년층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증가율 또한 심각하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증가율은 50대와 60대가 332% 이상 증가를 했다. 또한, 단체 피해인 기업 등의 경우 피해액이 무려 2,532%(18배)의 증가율을 보여 금융당국의 감시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성일종 의원은“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의 가파른 증가율과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이 내건 갖가지 정책과 어긋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이 사후약처방식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계좌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자료1) 피해유형별 피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6월 ²⁾
정부기관 사칭형 등	피해액	99,091	163,739	139,949	57,989	62,215	52,846
	피해건수	23,355	32,607	20,890	8,699	7,712	5,786
대출빙자형	피해액	-	95,747	104,497	134,366	180,845	127,394
	피해건수	-	34,417	36,805	37,222	42,301	25,210
합계	피해액	99,091	259,487	244,446	192,356	243,060	180,240
	피해건수	23,355	67,024	57,695	45,921	50,013	30,996

- 1) '14.7.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포함
 2)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자료2) 성별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6월 ²⁾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남	42,690	117,386	107,029	99,145	119,989	89,557
여	56,235	139,822	135,419	90,231	118,702	87,689
기업 등	166	2,278	1,998	2,980	4,369	2,994
총합계	99,091	259,487	244,446	192,356	243,060	180,240

- 1) '14.7.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포함
 2)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자료3) 연령별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6월 ²⁾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19세 미만	40	59	165	157	93	64
20~29세	9,409	25,536	37,470	24,638	31,509	12,247
30~39세	23,172	64,293	63,279	39,105	45,315	30,274
40~49세	15,025	58,294	57,246	52,222	67,275	49,166
50~59세	14,341	51,684	48,690	47,741	64,885	50,452
60세 이상	36,937	57,343	35,598	25,512	29,613	35,043
기업 등	166	2,278	1,998	2,980	4,369	2,994
총합계	99,091	259,487	244,446	192,356	243,060	180,240

- 1) '14.7.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포함
 2)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자료4) 지역별 피해 현황 (피해자 주소지 기준)

구분	2013년	2014년 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6월 ²⁾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강원도	3,350	6,147	6,650	4,986	6,558	4,316
경기도	20,530	66,080	61,998	49,925	61,688	46,366
경상남도	5,079	15,275	13,859	13,044	17,728	11,579
경상북도	5,128	10,083	9,646	8,275	10,863	7,791
광주광역시	2,617	6,718	5,519	5,116	7,438	4,624
대구광역시	3,971	10,634	10,061	8,407	9,527	7,244
대전광역시	3,078	7,267	7,629	4,520	7,118	5,541
부산광역시	5,490	15,745	15,075	13,029	17,530	12,753
서울특별시	30,037	69,089	63,014	41,174	49,817	37,416
세종특별자치시	166	801	774	580	1,113	824
울산광역시	1,689	6,638	5,958	4,815	6,233	4,943
인천광역시	3,802	12,623	13,013	11,530	14,204	10,887
전라남도	3,395	6,909	6,509	5,172	6,409	4,903
전라북도	2,789	7,251	6,254	6,237	6,948	5,691
제주특별자치도	1,121	3,098	2,507	2,385	3,252	2,983
충청남도	3,671	9,315	8,828	7,888	9,679	7,352
충청북도	2,824	5,717	6,632	5,154	6,900	4,977
기타*	355	95	518	119	56	50
총합계	99,091	259,487	244,446	192,356	243,060	180,240

* 지역 구분이 안되는 경우

1) '14.7.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10에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포함

2)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나날이 발전되는 보험사기의 다양화... 턱없이 부족한 환수금액

- 2017년 1월 교통사고 16,970건 → 12월 18,249건 나날이 증가되는 교통사고
- 손해보험 사기 중 '방화'건으로 5년간 한 사람당 지급받은 금액 평균 2억여 만원

-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교통사고 건수는 18,249건으로 2017년 1월 16,970건보다 1279건이 증가했다. 매월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씩 증가한 셈이다. 이렇듯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사고 중에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보험사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5189억 6천200만원, ▲2014년 5997억 3000만원, ▲2015년 6천548억 8500만원, ▲2016년 7천185억 600만원, ▲2017년 7301억 80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2112억 1800만원 증가했다.
 - 특히, 환수액의 경우 보험사기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2013년 293억 9800만원, ▲2014년 322억, 2200만원, ▲2015년 294억 500만원, ▲2016년 292억 2400만원, ▲2017년 330억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약 4.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3년 743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877억 8백만원, ▲2015년 890억 7700만원, ▲2016년 963억 4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727억 5500만원으로 감소했다.
 - 하지만, 생명보험사 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 사람당 받는 지급액의 경우 최대 4억 8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각 연도별 유형별로 한 사람이 최대 많이 받은 금액의 경우 ▲2013년 '허위사망 및 실종'사기로 4억 8,650만원을 지급 받았다. ▲2014년의 경우 '살인 및 상해'사기로 4억 2776만 4,706원을 지급 받았다. ▲2015년 또한 '살인 및 상해'로 1억 5000만원을 ▲2016년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4억 3757만 1,429원, 마지막으로, ▲2017년 '자살 및 자해'로 8370만 5,128원을 지급받았다.
 - 매년 상위를 차지한 유형은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나타났다.

-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 보험사기로 지급한 금액은 적으나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 ▲2013년 4446억 1300만원, ▲2014년 5120억 210만원, ▲2015년 5658억 800만원, ▲2016년 6221억 6700만원, ▲2017년 6574억 2500만원으로 5년간 2128억 1200만원 증가를 해 큰 충격을 주었다.
 - 손해보험사의 유형별 사기를 살펴보면, 5년간 제일 많이 지급 받은 사기 유형은 ‘방화’로 ▲2013년 1억 7513만 9,749원, ▲2014년 2억 9983만 220원, ▲2015년 2억 5499만 367원, ▲2016년 2억 43만 9,082원, ▲2017년 2억 9436만 117원을 지급받았다.
 - ‘방화’사기 유형으로 5년간 한 사람당 평균 2억 원을 지급받았다.
- 한 예로, A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보험금(4천5백만 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고시원생 30여명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후, 마치 강도가 침입하여 불을 질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한 사람당 지급받는 금액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생명보험은 감소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지급받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 2013년~2017년 1인 평균 지급받은 금액 / 생명보험
 - 남성 ▲2013년 2153만 3,216원, ▲2014년 1866만 5,712원, ▲2015년 1597만 9,909만원, ▲2016년 1354만 4,319만원, ▲2017년 1294만 604원
 - 여성 ▲2013년 1554만 997원, ▲2014년 1242만 2,668원, ▲2015년 1278만 8,771원, ▲2016년 1052만 4,757원, ▲2017년 905만 1,249원
- 2013년~2017년 1인 평균 지급받은 금액 / 손해보험
 - 남성 ▲2013년 621만 868원, ▲2014년 648만 9,913원, ▲2015년 716만 1,545원, ▲2016년 825만 5,640원, ▲2017년 866만 794원
 - 여성 ▲2013년 572만 443원, ▲2014년 660만 2,736원, ▲2015년 782만 1,229원, ▲2016년 846만 7,272원, ▲2017년 833만 9,267원

-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과거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여러번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점점 보험사기 금액과 사기를 친 인원의 급증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여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여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1)

구분	13년		1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생명보험	남성	1,701	36,628	2,444	45,619
	여성	2,427	37,718	3,388	42,088
	계	4,128	74,347	5,832	87,707
손해보험	남성	55,281	343,343	58,886	382,165
	여성	17,703	101,269	19,667	129,856
	계	72,984	444,612	78,553	512,021
전체	남성	56,982	379,972	61,330	427,786
	여성	20,130	138,990	23,055	171,944
	계	77,112	518,962	84,385	599,730

15년		16년		17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638	42,155	3,362	45,536	2,879	37,256
3,669	46,922	4,827	50,803	3,922	35,499
6,307	89,077	8,189	96,339	6,801	72,755
56,690	405,988	53,771	443,914	54,489	471,918
20,434	159,819	21,052	178,253	22,245	185,507
77,124	565,807	74,823	622,167	76,734	657,425
59,328	448,144	57,133	489,450	57,368	509,174
24,103	206,741	25,879	229,056	26,167	221,006
83,431	654,885	83,012	718,506	83,535	730,180

참고자료2)

연도별 환수 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명보험	4,792	6,053	7,171	8,930	8,011
손해보험	24,606	26,169	22,234	20,294	25,018
전체	29,398	32,222	29,405	29,224	33,029

참고자료3) 생명보험사 유형별 사기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13		201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고지의무위반	1,071	13,826	1,817	17,402
기타	10	17	112	1,100
사고내용조작	70	484	177	1,238
살인,상해	22	7,837	17	7,272
자기재산손괴	-	-	-	-
자살,자해	58	15,700	195	14,799
허위(과다)입원	2,770	24,530	3,378	37,757
허위(과다)장해	76	10,251	123	7,488
허위(과다)진단	18	320	12	420
허위사망,실종	2	973		
허위수술	31	409	1	232
생명보험(전체)	4,128	74,347	5,832	87,708

(단위: 명 / 백만원)

2015		2016		201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654	20,481	2,695	18,538	2,214	18,049
43	1,534	196	2,589	324	830
142	2,050	1,190	3,530	917	1,700
8	1,200	9	1,221	4	308
-	-	-	-	1	7
144	9,974	159	11,377	78	6,529
2,750	46,730	3,562	50,362	2,833	34,627
291	5,515	250	4,905	388	10,390
185	1,076	32	350	20	221
2	195	7	3,063		
88	322	89	405	22	94
6,307	89,077	8,189	96,340	6,801	72,755

참고자료3) 손해보험사 유형별 사기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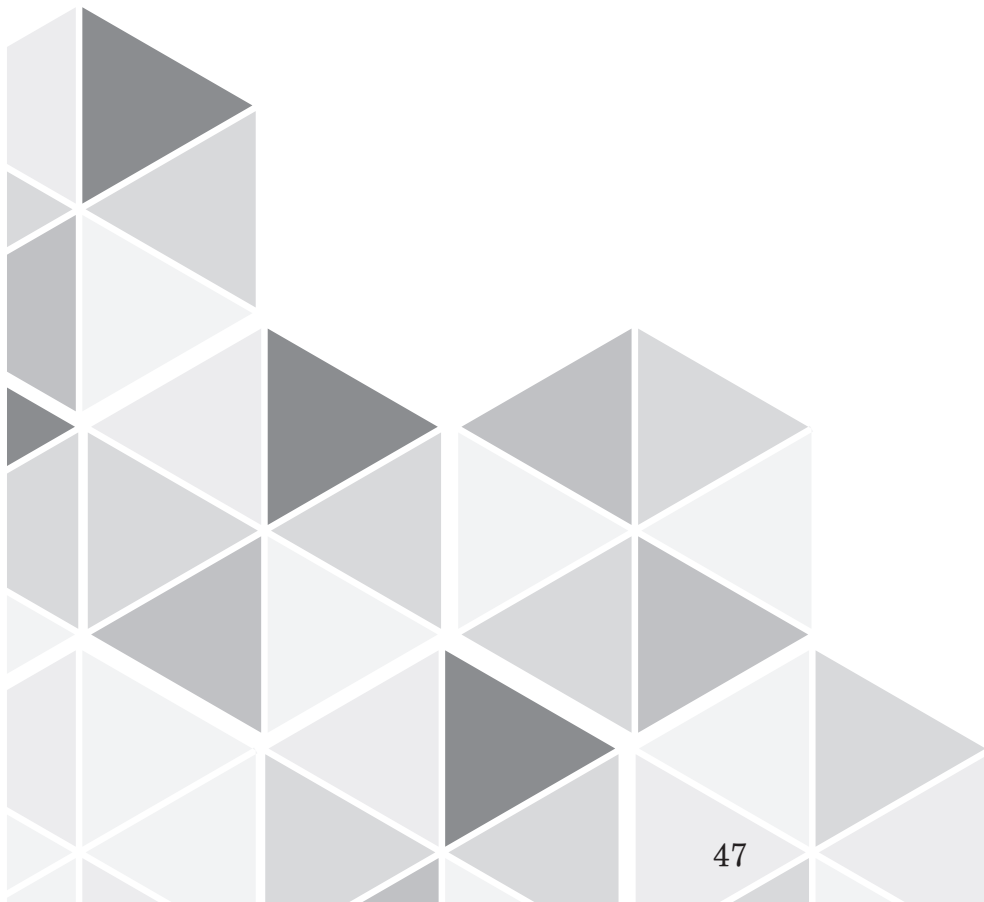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고의총돌	4,517	28,898	4,465	29,079
고지의무위반	5,449	36,857	6,286	43,060
기타	3,872	25,272	2,739	27,976
방화	52	9,107	32	9,595
병원의 과장청구	782	3,845	320	4,306
보유불명사고	521	1,100	404	835
사고내용조작	9,147	86,217	11,359	105,260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2,086	7,115	1,253	4,389
사고차량 바꿔치기	4,152	16,259	4,215	13,143
살인,상해	88	1,998	64	2,709
운전자 바꿔치기	13,579	58,105	13,573	57,400
음주,무면허운전	17,999	63,722	19,749	74,235
자기재산손괴	64	750	5	10
자동차사고피해과장	2,505	20,315	5,969	31,076
자살,자해	681	31,725	791	41,674
자해	559	4,228	184	1,186
정비공장의 과장청구	359	1,812	897	4,302
차량도난(내수,수출)	317	6,725	251	4,978
차량손괴	86	1,176	133	1,435
피해자(물) 끼워넣기	1,146	5,253	706	4,368
허위(과다)입원	4,455	20,225	4,456	35,756
허위(과다)장해	208	8,797	344	10,662
허위(과다)진단	335	4,247	349	4,256
허위사망,실종	4	780	3	290
허위수술	21	84	6	41
손해보험	72,984	444,613	78,553	512,021

2015		2016		201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4,775	35,211	4,935	30,678	5,482	30,141
8,053	54,623	8,256	57,913	7,456	66,548
2,270	24,265	2,454	36,157	4,311	51,514
36	9,180	43	8,619	25	7,359
920	3,404	641	9,688	878	19,095
213	451	190	455	146	462
10,827	117,749	10,505	123,084	10,710	114,386
963	4,306	718	2,938	768	4,801
4,040	14,570	3,778	13,730	3,145	12,213
64	1,643	155	3,050	96	3,607
12,220	52,494	12,068	54,969	11,209	51,415
19,976	84,511	17,692	85,197	16,604	80,570
7	128	15	349	3	512
3,809	27,334	4,151	26,703	3,638	28,255
613	35,732	680	62,237	382	37,135
298	2,823	241	2,783	148	2,108
421	4,565	720	12,136	1,216	6,860
176	4,549	121	3,339	224	3,289
148	1,138	97	761	83	945
501	1,751	437	1,565	637	4,881
5,430	52,970	5,969	64,333	6,576	82,188
1,026	24,080	428	11,808	1,926	26,348
326	7,689	498	9,092	886	21,786
6	630	2	109	4	269
6	15	29	474	181	739
77,124	565,808	74,823	622,167	76,734	657,425



국정감사 질의서 자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일종**



서민에게 희망의
금융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경기 침체에 더해 **법정이자율이 인하** 되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이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 들고 있음

☞ 이는 **‘대부업체 음성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법정최고금리 추이 및 저신용자 대부업 대출 승인율

<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 추이 >

구분 (년/월)	2002. 10	2007. 10	2010. 07	2011. 06	2014. 04	2016. 03	2018. 02
법정 최고금리	66.0%	49.0%	44.0%	39.0%	34.9%	27.9%	24.0%

< 저신용자(7~10등급) 대부업 대출 승인율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상반기)
7~10등급	26.9%	21.3%	16.4%	16.2%	12.8%

*자료: NICE 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제출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 이용 현황

□ 서민들의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을수록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업체는 금리가 인하될수록 수익률 감소로 이어져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 대부업 주 이용자는 평균불량률이 높은 **저신용자(7~10등급)**

< 등급별 불량률 >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0.67%	~1.86%	~6.34%	~9.72%	~11.89%	~34.60%

대부업 이용 현황

□ 실제로 법정이자율이 **24%로 인하** 된지(18.2) 5개월 만에 전년(17년) 동기 대비

→ 대부업체 고신용자(1~6등급) 신규 신용대출자는 **12.0%(26,551명) 감소**에 그친 반면,

→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에는 **22.7%(70,808명)가 감소**

“고신용자 보다 2배 가까이 급감”

이는 상반기 규모로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연간 14만 명 이상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짐.

☞ 이는 최고금리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

구분 (단위 :명)	17년 上 (1~6월)	비중(%)	18년 上 (1~6월)	비중(%)	증감	증감율(%)
1~6등급	220,536	41.4	193,985	44.6	-26,551	-12.0
7~10등급	312,007	58.6	241,199	55.4	-70,808	-22.7
합계	532,545	100.0	435,184	100.0	-97,361	-18.3%

*자료: NICE 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제출

2018년도 대부업 대출 승인율(저신용자)은 12.8%이다.

18년 상반기 대부업 저신용자 신규대출자 수가 **24.1만 명** 감안하면,

실제 신청자 수는 188.4만 명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부업 대출도 거절된 160만 여명은 과연 어느 곳으로 가서 '돈'을 구했겠는가?**

대부업체 등록 현황

□ 8년 만에 **절반(45.3%) 급감** 한 등록 대부업체

< 등록 대부업체 수 추이 >

구분	2009.12	2013.12	2017.12
등록업체수	14,783	9,326	8,084
(개인업체)	(13,432)	(7,620)	(5,491)

*자료: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체 승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등록수가 급감하는 것은
대부업체가 음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결국 대부업에서 외면 받은 신청자들이 갈 곳은 불법사채시장 아닌가?

불법사채 이용 현황

- 한국갤럽이 '1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법사채 이용자는 **110%이상 고금리** 로 약 3,000만원 ~ 5,000만원의 대출액 을 이용
- (20세이상 성인인구로 환산)시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이용자 약 30 ~ 40만명, 이용총액 **약 10조 ~ 24조** 로 추정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및 규모 추정

	2015년	2016년
이용총액 (추정)	10조5897억원	24조1144억원
1인당 평균 이용 총액	3209만원	5608만원
이용자 수 (추정)	33만명	43만명
연이자율	114.58%	110.88%

자료: 한국갤럽

< 불법사채 이용 규모 추정 >

구분		2015년	2016년	변동(률)	
조사결과	1인당 이용 총액(만원)	3,209	5,608	2,399(74.8%)	
	1인당 이용 금액(만원)	2,162	3,159	997(46.1%)	
	연이자율 (월이자율)	114.58% (9.54%)	110.88% (9.24%)	△3.70%p (△0.30%p)	
	이용목적	사업자금	42.9%	48.8%	5.9%p
		가계생활 자금	35.9%	36.1%	0.2%p
		타대출금 상황	25.2%	10.2%	△15%p
		쇼핑 및 오락	5.9%	7.1%	1.2%p
기타		5.4%	7.0%	1.6%p	
이용 규모 추정	20세 이상 성인인구 (만 명)	3,984	4,050	20세 이상 성인 인구 환산시 이용 규모	
	이용자 수 (만 명)	33	43		
	이용 총액 (억 원)	105,897	241,144		
	이용 금액 (억 원)	86,196	135,837		

*(사)서민금융연구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8년 상반기에만
대부업을 찾았다가 **거절당한 신청자가 160만 여명(다중채무 감안 최소
40만명)** 가운데 대부분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사채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의하는가?

이러한 흐름은 충분히 예상된 문제로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는가?

금융당국 대응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 발표(18.1)

- 18년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9%→24%)** 시행을 앞두고 열린 범부처 대책 발표
에서도 시행 시 뒤따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

- ▲ **(불법사금융)**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에 따른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 **차단** 필요
- ▲ **(정책서민금융)** 대부업자 등의 신용평가 미흡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 기회까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
- ▲ **(복지지원)**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도 모색

불법사채 피해 규모 증가세

< 불법사채피해 민원건수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8월
사채업자 수(명)	262	310	622	372
대출원금(억 원)	147	76	521	202

* 자료 : 대부협회

불법사채피해 건수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발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서민금융상품 이용 현황

□ 정부는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4대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위한 상품 역시 저신용자(8~10등급) 지원 비중이 9.2%에 불과'

< 신용등급별 서민금융상품 공급 비중 >

구분	1~6등급	7등급	8~10등급
비중	60.4%	30.4%	9.2%

*자료: (사)서민금융연구원, 서민금융연구원 출판 기념 포럼 자료집

대부업을 찾는 이용자 중 절반 이상(54.6%)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임.

☞ **대부업에서 외면 받은 서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줘야 하는가?**

이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임

☞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 적 있는가?**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금융위 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8. 06. 29)

-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법률에 의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올해 2월부터 인하된 금리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항목에 이용자 실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또한 불법사채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신용자 및 신용회복 대상자들의 금융관리를 위한 **'금융주치의 제도'** 등 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하겠나?

자영업자의 한숨은 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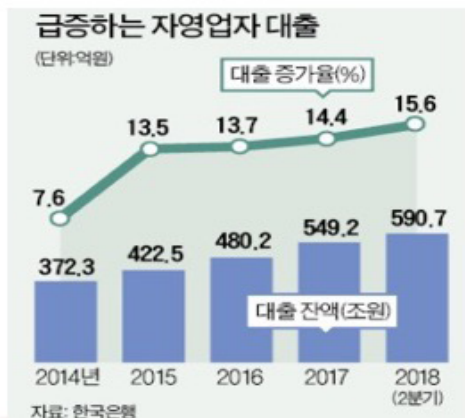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일종**

□ 자영업자 대출 규모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 '2018년 9월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 7,000억 원**
- 2014년엔 372조 3,000억 원에 그쳤으나 3년 반 사이 **200조원 넘게 늘었음**



한국경제 18.9.21

18

□ 자영업자 대출(고금리 이용 실태)

- 전체 자영업 대출의 **31%(183조원)**가 저축은행 등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연체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 자영업자 대출 연체 현황

- 2018년 6월 기준, **국내 은행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29%**

▲ 일반 가계대출 **0.25%**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0.64%**

19

통계로 보면 자영업자 연체율의 경우 일반 가계대출 보다는 높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오는데,

위기로 볼 수 있나?

통계로 보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연체율이 낮고 대출금액 비중이
높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면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 600조에 달하는 규모가 될 때까지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나?

20

□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모 급증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18.3.21) 가계부채점검회의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하거나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방침" 밝혀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 549.2조원이었는데,
발표 이후 6월말 기준 590.7조원으로 **41조원 급증함.**

☞ **대책은 엄중 조치한다고 겁만 주면 되는 것인가?**

21

□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

※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1%p 인상 시** 변동금리 부채를 진 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원 증가

자영업자의 증가 폭은 **122만원 늘어나** 부담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음.

22

□ 금리인상 압박 주체가 바로 정부

<총리와 장관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답변>

1)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

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 **“금리(인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바로 정부인데, 금리인상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공식입장은?

- 대책이 함께 발표되거나, 발표 전 연착륙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데, 고민할 것인가?

23

□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부담 가중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19년도 최저임금 기준)

*사업자, 근로자 1인 기준 **월 17만원, 연간 205만원** 인건비 추가 부담

- **(5인기준)** 연간 1,025만원 추가 부담

- 금리 1% 인상 시 자영업자 이자지급액 추가 부담 122만원 추가 부담

☞ 최저임금 추가 부담 **(1인기준)** 205만원, **금리 1% 인상 시 122만원 추가 부담**

- (1인기준) **327만원 추가 부담**

- (5인기준) **1147만원 추가 부담**



24

미투운동, 주 52시간제 도입 등 회식문화 위축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데, 대책은커녕 금리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의 걱정만 주고 있는 실정임.

- 내용 없고 생색만 내는 고용안정자금, 카드사 팔 비틀어 10년 동안 11번에 거친 수수료 인하, 정착 장담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페이 등
- 유명무실한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음.
- 카드 활성화로 1999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20조원**에서 2016년 **69조원**으로 **3.5배(245%)나 증가**된 세수 활용해야 함.
- 현재자영업자 지원대책 방안으로 제시된 700만원의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의향이 있는가?

25

누구를 위한 서민금융인가?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상품 재원조달

- **17년 말까지 37.5조원** 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 **정부가 운용중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예산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4대 금융상품인
 - ▲ **(미소금융)**은 기업·은행기부금과 휴면예금 이자수익
 - ▲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지자체, 금융회사 출연금
 - ▲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회수금
 - ▲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짐

<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 구성 >

상품		재원	현황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기업·은행기부금	기업의 잔여 기부금 납입을 위해 협의 필요
	지역법인	일반 기부금	사실상 종료
	민간사업수행기관	휴면예금 이자수익	휴면예금 출연규모 감소
햇살론	근로자햇살론	복권기금 금융회사 출연금	·20년 복권기금 출연 종료 도래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적 (한도9,000억원)
	사업자햇살론	복권기금, 지자체·금융회사 출연금	1차 사업의 잔여재원으로 운영 중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회수금	자금유입 제한적
새희망홀씨		은행 자체 재원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 협의

□ 17년 11월, 대대적 발표한 **'빛 탕감 정책'** 자원 역시
금융회사 기부금 총당

절벽에 내몰린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불법사채시장
에서 나오기 위해 내미는 손을 국가가 잡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정부는 이용자 분석이나 예방 프로그램 등
재원이 들어가야 할 곳에 한 푼도 들이지 않으면서
기업과 금융회사 팔 비틀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에 대해

☞ 마치 **대통령이 시혜 베푸는 듯**, 포퓰리즘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대표언론자료



경제 금융·증권

법정 최고금리 인하 뒤...올해 대부업서 저신용자 신규대출 22% ↓

등록 :2018-10-10 15:11 수정 :2018-10-10 15:16

[2018 국정감사]

성일중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 2월 정부가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췄지만, 올해 상반기 대부업에서만 저신용자 신규 대출자가 22.7% 급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10만명이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에서마저 거절당한 이들이 갈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은 충분하지 않아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저신용자(7~10등급) 신규 대출자 수가 24만11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주면 22.7%(7만80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중신용자(1~6등급)의 신규 대출자 수는 12%(2만6551명)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 18.3%(9만7361명)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는 부실률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신규 대출심사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대출승인율도 줄었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대출승인율도 지난해 16.2%에서 올해 상반기 12.8%로 떨어졌다.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대부업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저신용자들이 무분별하게 대출받는 행태를 바로잡는 장점도 있지만, 업체 쪽의 리스크 기피로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긴다. 저축은행도 2016년 12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26.4%였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진 뒤 지난 5월엔 23.4%로 떨어지는 등 모든 금융권에 걸친 저신용자들의 대출 탈락률은 동반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민원은 2016년 310건에서 2017년 622건,

올해 8월 기준 372건이 대부금융협회에 접수돼 증가 추세에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관련 비공개 내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는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로 인하할 경우 최소 38만8천명에서 최대 162만명이 대출에서 탈락할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예측에 비례하게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자금 재원은 늘어나지 못했다.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5000억, 햇살론 2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조5천억원을 공급해 약 3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 예측치 최소 인원인 38만여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여기에 은행업권이 따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도 약 3조원 규모다. 이들 정책 서민금융상품마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1~6등급 이용자 비율이 60.4%에 이른다.

재원 구조가 휴면예금과 금융사 기부금, 한시적인 복권기금 등으로 정부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아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중인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층을 고민하는 것과 함께 정부 일반예산을 넣는 방안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이슈 2018 국정감사

[포토] 독도에 메아리 친 "독도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금리인하, '청와대-조선일보-한은' 커넥션 의혹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인가' 정당한 채용인가?

'장애인 고용 회피' 공공기관, 예산안 믿고 혈세로 벌금 '평평'

임대료 못내 떠난 SH임대아파트 입주자 4년간 916가구

홈 > 뉴스 > 종합 | 뉴스 투데이

[2018 국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늘어

2018년 10월 11일 (목) 11:09:03

염희선 기자 ✉ spike@kbanker.co.kr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건수는 9만9049건, 대출빙자형 피해건수는 17만5955건을 기록했다.

두 피해유형의 피해액은 총 1조2186억8000만원에 육박했으며, 1건당 피해금액은 약 442만1499원이었다.

연도별로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1건당 피해액을 살펴보면 2013년 424만2817원, 2014년 387만1553원, 2015년 423만6866원, 2017년 418만8846원, 2017년 485만9936원, 2018년 상반기 581만4944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피해금액 비중이 높았다.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대다수 지역은 전체 피해금액의 7%내외를 차지했다. 반면 경기도는 25.15%(3065억8700만원), 서울특별시는 23.84%(2905억4700만원)의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피해액은 2013년 426억9000만원, 2017년 1199억8900만원, 2018년 상반기 895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같은 기간 562억3500만원, 1187억200만원, 876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피 비중이 높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율을 보면 50대와 60대가 332% 이상 증가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의 가파른 증가율과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이 내건 갖가지 정책과 어긋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이 사후약처방식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계좌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피해 작년에만 7300억...환수율은 달랑 4.5%

피해금액 급증...보험사기 가담자 작년에만 8만명

-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5:12
-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5:12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져 작년에만 피해금액이 7301억원을 넘었다. 사기 가담인원만 8만 3535명이다. 특히 환수율이 피해액의 4.5%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환수 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명보험	4,792	6,053	7,171	8,930	8,011
손해보험	24,606	26,169	22,234	20,294	25,018
전체	29,398	32,222	29,405	29,224	33,029

[자료 = 성일종 의원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액은 7301억 8000만원이다. 지난 2013년 5189억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2112억원이 늘어났다.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3년 5189억 6200만원을 시작으로 △2014년 5997억 3000만원 △2015년 6548억 8500만원 △2016년 7185억 600만원 △2017년 7301억 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가담인원도 증가해 작년에만 8만 3535명이다. 지난 2013년 7만 7112명이 가담한 것과 비교하면 6000여 명이 늘었다. 생명보험 관련 인원이 6801명, 손해보험 관련은 7만 6734명이다.

사기 수법도 다양해져 생명보험사에서는 작년 한 해 허위과다입원(2833명)과 고지의무위반(2214명), 사고내용조작(917명)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1만 6604명)과 운전자 바꿔치기(1만 1209명), 사고내용조작(1만 710명)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환수율은 약 4.5%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환수액은 △2013년 293억 9800만원 △2014년 322억 2200만원 △2015년 294억 500만원 △2016년 292억 2400만원 △2017년 330억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여러번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됐다”며,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여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청구 방식 개선은 커녕 뒷걸음질 하는 대형 보험사

- 실손가입자 3,400만명 시대, 66% 가입하고 있는 국민보험
- 소액청구포기율 64.5%에 달하는데 청구 방식 팩스에 의존
- 4대 대형생보사(삼성,흥국,교보,한화) 대표 팩스 번호조차 두지 않아 불편 가중
- 삼성생명, 당초부터 두지 않고, 흥국, 교보, 한화 대표 팩스번호 없애는 등 소비자 불편가중으로 포기율 높이려는 대형생보사 담합, 횡포 실태 지적

- 20세 이상 성인 인구 77.3%가 가입해 국민보험이라고 일컫는 실손의료보험이 각 보험사의 설정한 청구방식이 불편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조사와 각 보험사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 보험금 15만원 이하(소액) 청구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2016년 64.5%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2018년 29.4%인 것으로 드러났다.
 - 소액 청구의 경우, 청구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 전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 보험사들이 고의적 미개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팩스에 의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22.1%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형보험사 중 4곳은 여전히 대표 팩스번호를 두지 않고 있음.
 -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대표 팩스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콜센터에 전화해 안내에 따라 개별 번호를 요청해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 및 생명보험사의 팩스 서비스 지침 현황〉

손해보험사	
보험사명	팩스 서비스 지침
삼성화재	○
NH농협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흥국화재	○
D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우체국보험	○
MG손해보험	○
AXA손해보험	○

생명보험사	
보험사명	팩스 서비스 지침
삼성생명	콜센터 전화해 개별 팩스별로 요청 필요
흥국생명	콜센터 전화해 개별 팩스별로 요청 필요
교보생명	콜센터 전화해 개별 팩스별로 요청 필요
한화생명	콜센터 전화해 개별 팩스별로 요청 필요
농협생명	○
KB생명	○
DB생명	○
AXA생명	○

- 이에 성일종 의원은 “결국 대형 보험사들이 각 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불편 개선보다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태는 보험료 청구 포기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업계의 담합이 의심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대체부품 보험특약, 누구를 위한 신설인가?

- 1,500만대 자차 가입되어 있지만 특약 신설이후 실적이 고작 8건에 불과
- 보험사 유인책 없는 유명무실한 특약
 - 보험사, 활성화 될수록 손해 보는 구조
- 제도 재설계를 통해 실효성 높여야
 - 정비소에 떠넘긴 자기부담금 납부창구 없애고, 대체부품 사용시 환급액 자기부담금으로 총당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 정부가 의욕적으로 올해 초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해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홍보부족과 여러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실적은 저조하고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시행 이후,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정책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부담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처럼 대체부품 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 대비 59% 수준이며,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 OEM이 통상 10% 할인 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걸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6% 수준 밖에 남지 않는 구조가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대체부품 활성화 시, 보험사는 추가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인식부족 영향도 기인할 수 있지만, 위 분석과 같이 구조적으로 가격 유인이 부족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서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체부품이 활성화 된 국가일수록 부품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차부품시장 대체부품 비중이 42%인 프랑스의 경우, 차량 1대당 AS부품 매출이 11,220 원인데 비해, 대체부품 비중이 5%인 우리나라의 경우 AS부품 매출이 157,611원으로 양국 간 14배 이상 차이가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A/S 대체부품 시장 비교〉



자료 : 금융감독원

-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제도는 단순한 특약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부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도의 구조적 요인과 실적 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가 정착되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 부품 보험 사용 현황〉

(단위 : 1원)

NO	보험사명	차종	부품명	유통사	OE 부품	인증부품	환금액(25%)
1	삼성화재	AUDI A6	전좌휠더	코리아오토파츠	484,900	286,190	121,230
2	삼성화재	E-Class W211	전좌 방향지시등	SMTNS	1,149,500	678,300	287,380
2			전우 방향지시등		1,149,500	678,300	287,380
3	한화	520D	전 범퍼커버	코리아오토파츠	732,600	432,240	183,150
4	현대해상	AUDI A6	전 범퍼커버	코리아오토파츠	670,100	395,400	167,530
4			전 좌 휠더		491,300	289,900	122,830
4			본넷		1,136,400	670,500	284,100
4			전 좌 방향지시등	SMTNS	1,070,630	631,700	267,660
4			전 우 방향지시등		1,070,630	631,700	267,660
5			롯데	E-Class	전 범퍼커버	코리아오토파츠	841,000
5	전우휠더	560,000			318,500		140,000
5	방향지시등	SMTNS			2,961,200	1,570,600	740,300
6	메리츠화재	E-Class	전 좌 방향지시등	SMTNS	1,916,200	1,130,600	479,050
7	삼성화재	E-Class	전 우 방향지시등	SMTNS	1,750,000	1,032,500	437,500
8	AXA	E-Class	전 좌 방향지시등	SMTNS	2,961,200	1,884,400	740,300
				합계	18,945,160	11,172,030	2,747,400

*자료: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국정감사 질의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일종**



살인 부르는 불법사채시장,
두고만 볼 것인가
[금융감독원]

□ 옥천 네 모녀 사건을 기억하는가?

(사건 배경)

- 수 억 원의 빚 때문에 사채를 끌어 쓰는 등 악순환의 연속으로 집에서 **아내와 딸 3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



□ 불법사채시장의 규모

- 한국갤럽이 '1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법사채 이용자는 **110%이상 고금리**로 약 3,000만원 ~ 5,000만원의 대출액을 이용
- (20세이상 성인인구로 환산)시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이용자 약 30 ~ 40만명, 이용총액 **약 10조 ~ 24조**로 추정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및 규모 추정

	2015년	2016년
이용총액 (추정)	10조5897억원	24조1144억원
1인당 평균 이용 총액	3209만원	5608만원
이용자 수 (추정)	33만명	43만명
연이자율	114.58%	110.88%

자료: 한국갤럽

< 불법사채 이용 규모 추정 >

구분		2015년	2016년	변동(률)	
조사결과	1인당 이용 총액(만원)	3,209	5,608	2,399(74.8%)	
	1인당 이용 금액(만원)	2,162	3,159	997(46.1%)	
	연이자율 (월이자율)	114.58% (9.54%)	110.88% (9.24%)	△3.70%p (△0.30%p)	
	이용목적	사업자금	42.9%	48.8%	5.9%p
		가계생활 자금	35.9%	36.1%	0.2%p
		타대출금 상환	25.2%	10.2%	△15%p
쇼핑 및 오락		5.9%	7.1%	1.2%p	
기타		5.4%	7.0%	1.6%p	
이용 규모 추정	20세 이상 성인인구 (만 명)	3,984	4,050	20세 이상 성인 인구 환산시 이용 규모	
	이용자 수 (만 명)	33	43		
	이용 총액 (억 원)	105,897	241,144		
	이용 금액 (억 원)	86,196	135,837		

*(사)서민금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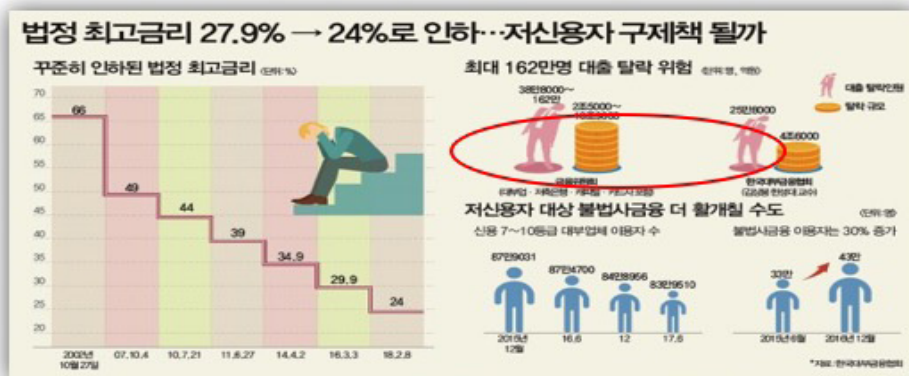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이탈(배제) 현황

(한성대 김상보 교수) 연구자료

☞ 최고금리가 27.9% 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저신용자 52.3만 명** 이 금융권에서 배제

(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위원) 분석자료

☞ 최고금리 20% 인하 시, **최대 86만 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에서 배제 추정



□ **법정최고금리 관련 대통령 공약**

- '임기 내 법정최고금리 **20%** 까지 인하'

공약이행에 따라 24%였던 최고금리가 **올해 2월부터 24%까지 인하** 됨

문재인 대통령 '서민금융' 공약 일부

대출 금리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27.9%→25%
	▷임기중 최고 금리 20% 까지 일원화
채무 정리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1.6조 채무 정리
	▷죽은채권' 시효 경과 사실 고지, 상황 중용 방지
카드수수료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2억원→3억원, 3억원 →5억원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연 매출 2억원 이하(0.8%)는 점진적 인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1.3%→1.0%로 인하

7

□ **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

- 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8. 06. 29)

**"최고금리 인하('16.3월~, 34.9% →27.9%)가 시장 전반적인 영업 위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 잔액(조원)	:	('15.12말) 13.2	→	('16.12말) 14.6	→	('17.12말) 16.5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	('15.12말) 11.7	→	('16.12말) 12.8	→	('17.12말) 14.2
자산 100억원미만 법인	:	('15.12말) 0.8	→	('16.12말) 1.1	→	('17.12말) 1.5
개인	:	('15.12말) 0.6	→	('16.12말) 0.7	→	('17.12말) 0.7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금융감독원
	보도	'18.6.29일(금) 조건	배포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 (2100-2610)	담 당 자	홍 상 준 사무관 (2100-2612)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 동 공 (3145-7550)		전 광 준 대부업감독팀장 (3145-7435)	

제 목 : '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8

금융당국은 오히려 총액 증가로 대출 증가세가 높아 수익성에 의존한
대부업체의 불건전한 대출 권유 실태를 문제로 인식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까다로워진 대부업 심사로 인해
대부업에서 조차 외면 받은 이용자들을 어느 곳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 이용자 실태조사는 해보았는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일종**

☐ 대부업 이용자 실태

○ 실제로 법정이자율이 **24%로 인하** 된지(18.2) 5개월 만에 전년(17년) 동기 대비

→ 대부업체 고신용자(1~6등급) 신규 신용대출자는 **12.0%(26,551명) 감소**에 그친 반면,

→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에는 **22.7%(70,808명)가 감소**

“고신용자 보다 2배 가까이 급감”

Q5.

이는 상반기 규모로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연간 14만 명 이상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짐.

☞ 이는 최고금리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의 장애로 작용** 하고 있다는 것임.



<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

구분 (단위 :명)	17년 上 (1~6월)	비중(%)	18년 上 (1~6월)	비중(%)	증감	증감율(%)
1~6등급	220,536	41.4	193,985	44.6	-26,551	-12.0
7~10등급	312,007	58.6	241,199	55.4	-70,808	-22.7
합계	532,545	100.0	435,184	100.0	-97,361	-18.3%

*자료: NICE 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제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저신용자 신규대출자 수가 **24.1만명** 인데,
18년도 대출 승인율(저신용자) 12.8%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신청자 수는 188.4만명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부업 대출도 거절된 160만 여명은 과연 어느 곳으로 가서 '돈'을 구했겠는가?**

11

☐ 불법사채 피해 규모 증가세 (문재인 정부 피해 최대)

- 정부의 불법사채 단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의 불법사채피해 민원 및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 불법사채피해 민원건수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8월
사채업자 수(명)	262	310	622	372
대출원금(억 원)	147	76	521	202

* 자료 : 대부협회

12

< 미등록 대부업 신고 현황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미등록대부 (불법사채)	619	983	1152	1,220	2,306	2,818
(전년비증감률)		(58.8)	(17.2)	(5.9)	(89.0)	(22.2)

< 불법사채피해 민원건수 >

구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검거건수	979	1,038	59	6.0%	1,331	293	28.2%
검거인원	2,016	2,227	211	10.5%	2,931	704	31.6%

13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일종**

진단을 잘 해야 처방도 잘 할 수 있는데,
진단도 없이 처방을 하는데 실통한 방법이 있겠는가?

- ☞ 정부차원 사금융피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검경,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행자부** 등이 참여하는 **법 정부형태의 총리실에 특별 T/F** 등을 상시 설치 운영 필요하다고 봄.

14

실손의료보험 청구방식 개선 않는 '대형보험사의 진짜 의도'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러세스 혁신 방안 발표(17.12.12)

- ① 감독·검사 체계 효율적 재설계
- ② 검사·제재 공정성 제고
- ③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감독·검사 기능 대폭 강화



금융은 **좋은** 하게 소비자는 **좋은** 하게  금융감독원

Q1.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즉 국민에게 국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함.

거창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해야 하는 동시에

국민을 기만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실손의료보험, 이제는 국민보험이 되다

Q2.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전체 5,178만 명 중 3,419만 명(66%) 가입(‘17년)”

“20세 이상 성인 인구 77.3% 가입(‘18년 6월)”

Q3.

그렇다면 실손의료보험 소액(15만원 이하) 청구 포기율은 아는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29.4%(‘18년)”

“15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청구 포기율 64.5%(‘16년)”

Q4.

소액의 경우 **청구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포기** 하는 실정인데,

왜 **아직도 10년 전 방식** 그대로 청구방식이 유지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지 않는가?



Q5.

핀테크시대에 아직도 대리 청구와 팩스, 직접 방문 방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닌 보험사들의 **고의적 미개선** 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

“▲ 설계사 대리 청구(52.2%),

▲ **팩스(22.1%),**

▲ 직접 방문(13.6%)”



Q6.

국내 대형보험사로 꼽히는 **4대 생명보험사(삼성, 흥국, 교보, 한화)** 의

경우 다른 보험사와 달리 대표 팩스번호를 두고 있지 않음.

손해보험사	
보험사 명	팩스 서비스 지침
삼성화재	○
NH농협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흥국화재	○
D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우체국보험	○
MG손해보험	○
AXA손해보험	○

생명보험사	
보험사 명	팩스 서비스 지침
삼성생명	콜센터 전화해 개별 팩스별로 요청 필요
흥국생명	콜센터 전화해 개별 팩스별로 요청 필요
교보생명	콜센터 전화해 개별 팩스별로 요청 필요
한화생명	콜센터 전화해 개별 팩스별로 요청 필요
농협생명	○
KB생명	○
DB생명	○
AXA생명	○

- **소액 청구**의 경우 **영수증만을 팩스**로 보내는 것만으로 청구가 가능한데, 부득히 **4대 생보사**의 경우 **콜센터로 전화**해 **개별 가상팩스**를 받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더 하고 있는 실정



- 안 그래도 번거로움으로 소액 청구 포기율이 높는데, 보다 더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 특히,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당초부터 대표 팩스번호를 두고 있지 않았고, 이어 나머지 3개 생보사도 운영했던 대표 팩스번호를 없애는 등 서둘러 청구방식을 한 단계 복잡하게 변경하고 있음.

- 이는 대형 **생보사들의 담합이며 횡포**라고 해야 무방함.

청구방식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복잡하게 해 **청구율을 낮추려는 꼼수**임.

□ 최종구 금융위원장, 현장 찾아 간담회 (18.7.30)

☞ 여의도 보험개발원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시연회 찾아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 간담회 열고
청구방식 개선을 위한
인슈테크(보험과 신기술) 지원을 약속



Q7.

금융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인슈텐트를 지원할 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들이 청구 방식 개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청구 방식 개선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은 바로 이런 것임.
- 그간 **금감원의 노력**이 있었긴 했나?



- 우리 국민은 소비자를 위한 금융혁신은 **은행의 지배구조** 보다 **'생활의 불편'**을 **해소** 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제보다 잣밥'**에 관심이 더 많음.

□ 국민 불편 해소 보다 더 큰 명분이 있나?

종합감사와 같은 **금감원의 권한을 확대** 해 기업을 옥 죄이는 것 보다
국민 불편 해소라는 **국민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기업에게 더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대표언론자료



서울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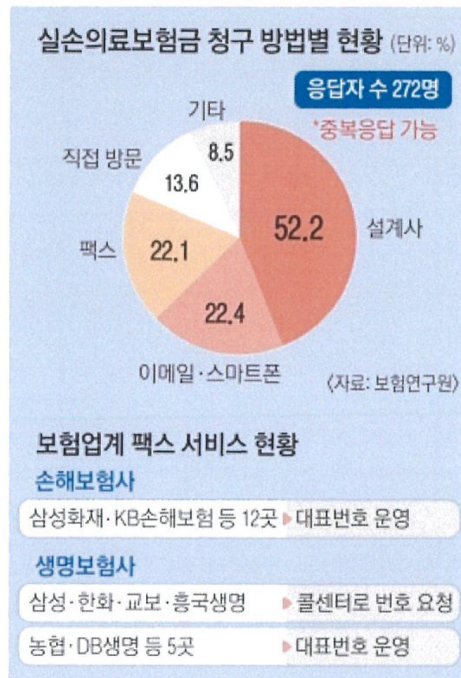
생보사 빅4 '대표 팩스' 없어...고객들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입력 : 2018-10-15 21:34 | 수정 : 2018-10-15 22:05

가입자 편의 무시... 청구 포기 유도 의심

모든 손보사들은 팩스 대표번호 운영

빅4 외 생보사도 대표번호 홈페이지 공개



번거로운 청구방식이 실손보험 미청구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한화·교보·흥국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4곳은 서류 접수를 위한 대표 팩스번호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소비자 중 상당수가 팩스를 통한 보험 청구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험사가 가입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흥국생명은 가입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건 뒤 팩스번호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팩스로 보낼 때마다 콜센터에 팩스번호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1월 대표번호

서비스를 중단했고 삼성·흥국생명도 그보다 앞서 팩스 대표번호를 없애고 개별 번호 체제로 옮겨갔다.

안모(31·여)씨는 “관련 서류가 많으면 스마트폰보다도 팩스가 편할 때가 있는데 콜센터를 한번 거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라면서 “대표번호를 둔 곳은 팩스만 보내면 수신확인 문자가 오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다”고 전했다.

해당 생명보험사의 팩스 청구 절차는 대다수 보험사들이 대표번호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도 이례적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모든 손해보험사들은 대표번호가 있고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표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접수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번호를 부여하다 보면 가입자가 번호를 잘못 파악해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사례도 있다”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많은 서류를 분류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가입자 편의와는 반대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팩스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비율은 22.1%로, 이메일·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른바 ‘간편청구’ 비율 22.4%와 비슷하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주 국감 기간 “보험금 청구 포기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업계 담합이 의심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팩스가 쏟아지는 것보다 개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보안성에서 훨씬 우수하다”며 “청구 포기율을 높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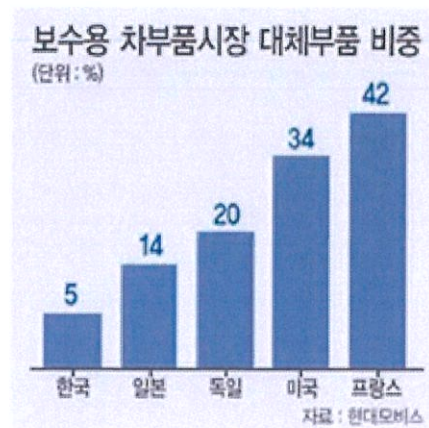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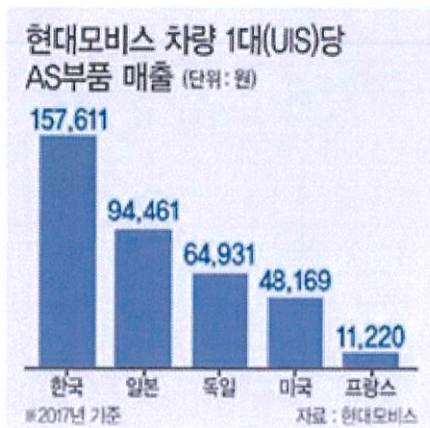
성일종 의원 "자동차 대체부품 보험특약 유명무실"

성 의원 "계약자의 보험료 및 자동차 부품값 인하 보완책 시급"

2018년 10월 13일 (토) 12:10:38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자동차 AS 대체부품 시장 비교>



자료: 금융감독원

▲ 자료=성일종 의원실 제공

[조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정부가 올해 초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해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홍보부족 등으로 실적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시행 이후 1500만대가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특약가입은 8건에 불과해 여전히 정책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부담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셈이다.

성일종 의원은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 대비 59% 수준이고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게 된다"며 "OEM이 통상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걸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6% 수준 밖에 남지 않는 구조가 대체부품 활용이 미진한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대체부품 활성화시 보험사는 추가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는 구조다. 소비자의 인식부족 영향도 기인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가격 유인이 부족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서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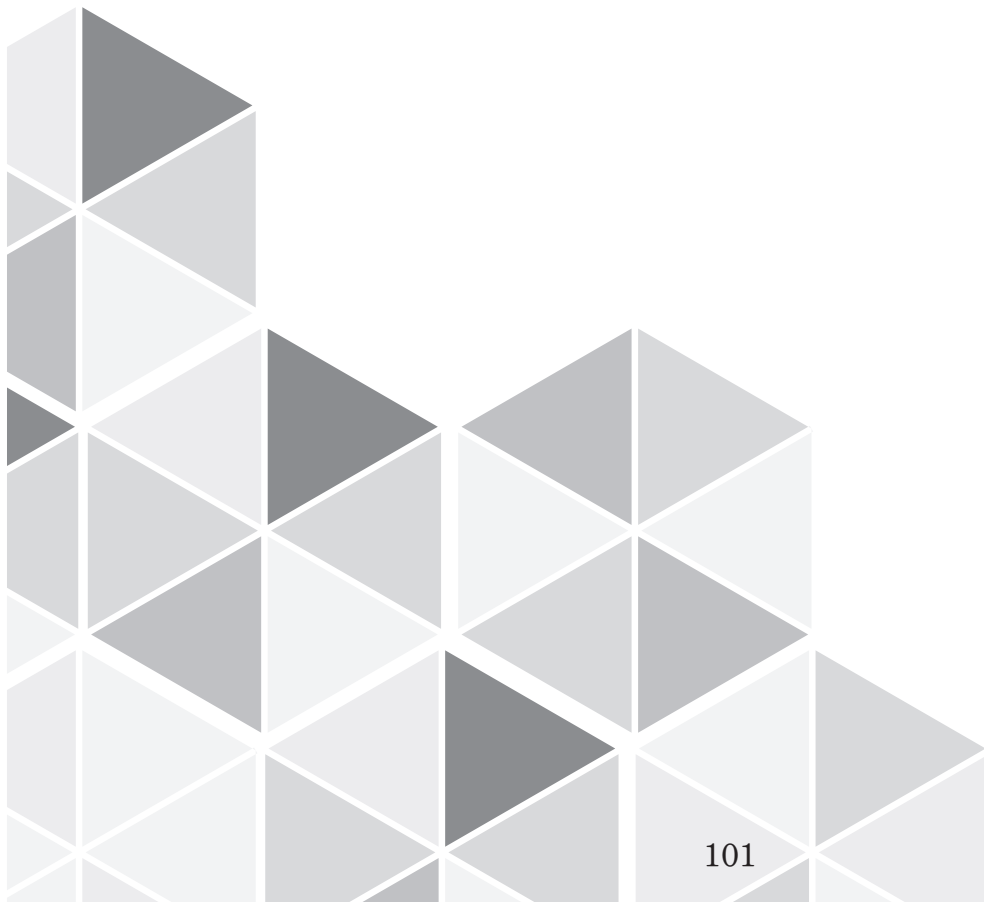
또 대체부품이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부품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부품시장 대체부품 비중이 42%인 프랑스의 경우 차량 1대당 AS부품 매출이 1만1220원인데 비해 대체부품 비중이 5%인 우리나라의 경우 AS부품 매출이 무려 15만7611원으로 14배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제도는 단순한 특약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부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며 "제도의 구조적 요인과 실적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가 정착되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 정부 빚 탕감 정책에 반기? 참여율 저조

- 빚 탕감 대책 관련 대부업체 273개 중 78개(28.6%)만 참여
- 미참여사 195개(71.4%) 1,625명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 정책 신뢰 유지위해 지속 노력해야

-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포함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가 지원대상이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권 매각 대상 기관 중 대부업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미참여 대부업권의 추심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권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지원 협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협약 대상 대부업체 273개 가운데 28.6%에 해당하는 78개 업체만이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협약에 참여하지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 중 71.4%에 이르는 195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1,62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업권 참여 현황 (‘18. 8. 14. 기준) 〉

구분		회사수(개)	비중	신청자(명)	비중
협약 참여사	회원사	70	25.6%	2,954	63.5%
	비회원사	8	2.9%	71	1.5%
소 계		78	28.6%	3,025	65.1%
협약 미참여사	회원사	130	47.6%	1,380	29.7%
	비회원사	65	23.8%	245	5.3%
소 계		195	71.4%	1,625	34.9%
합 계		273	100.0%	4,650	100.0%

-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195개 업체 중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모인 업체는 ▲유***금융업체로 243명의 신청자가 접수되었다. ▲이*어*한***대부업체가 112명 ▲제***대부업체가 86명 ▲케***대부업체 86명 ▲유***대부업체 82명 ▲와***대부업체 73명 ▲비***대부업체 53명 ▲히***대부업체 49명 ▲포***대부업체 46명 ▲대***대부업체 33명 ▲케***대부업체 29명 ▲피***대부업체 27명 ▲그***대부업체 24명 ▲엘***대부업체 21명 ▲케***대부업체 20명 ▲엠***대부업체 17명 ▲신***대부업체 15명 ▲트***대부업체 15명 ▲에***대부업체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 협약 참여가 저조한 사유로는 대부업체의 평균 부실채권 매입률 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하는 채권의 매각가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청률이 높게 되면 손해율 발생이 커지는 만큼 신청자 규모를 확인하고 사후에라도 협약에 참여할지를 고려하겠다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발표된 정부 정책에 채권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단 1명의 지원 대상자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을 비롯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1. < 협약 미 가입사 현황 (195개사, '18.8.14기준) >

회사명	신청자(명)	회사명	신청자(명)
유○○○○	243	삼○○○○	7
한○○○○	112	샤○○○○	7
제○○○○	86	씨○○○○	7
케○○○○	86	아○○○○	7
유○○○○	82	엠○○○○	7
와○○○○	73	이○○○○	7
비○○○○	53	케○○○○	7
히○○○○	49	케○○○○	7
포○○○○	46	디○○○○	6
대○○○○	33	삼○○○○	6
캐○○○○	29	원○○○○	6
피○○○○	27	지○○○○	6
그○○○○	24	펜○○○○	6
엘○○○○	21	프○○○○	6
케○○○○	20	피○○○○	6
엠○○○○	17	한○○○○	6
신○○○○	15	비○○○○	5
트○○○○	15	비○○○○	5
에○○○○	12	서○○○○	5
에○○○○	11	제○○○○	5
오○○○○	11	제○○○○	5
파○○○○	11	케○○○○	5
한○○○○	11	퍼○○○○	5
한○○○○	11	가○○○○	4
호○○○○	11	명○○○○	4
골○○○○	10	스○○○○	4
예○○○○	10	씨○○○○	4
파○○○○	10	에○○○○	4
희○○○○	10	지○○○○	4
러○○○○	9	투○○○○	4
백○○○○	9	한○○○○	4
토○○○○	9	거○○○○	3
피○○○○	9	골○○○○	3
부○○○○	8	금○○○○	3
비○○○○	8	대○○○○	3
씨○○○○	8	대○○○○	3
와○○○○	8	멘○○○○	3
케○○○○	8	베○○○○	3
헬○○○○	8	비○○○○	3
희○○○○	8	삼○○○○	3

회사명	신청자(명)	회사명	신청자(명)
성○○○○	3	조○○○○	2
세○○○○	3	케○○○○	2
세○○○○	3	케○○○○	2
신○○○○	3	케○○○○	2
씨○○○○	3	케○○○○	2
에○○○○	3	코○○○○	2
에○○○○	3	파○○○○	2
영○○○○	3	페○○○○	2
원○○○○	3	한○○○○	2
제○○○○	3	한○○○○	2
케○○○○	3	한○○○○	2
태○○○○	3	해○○○○	2
트○○○○	3	가○○○○	1
폴○○○○	3	굿○○○○	1
피○○○○	3	나○○○○	1
피○○○○	3	대○○○○	1
한○○○○	3	대○○○○	1
한○○○○	3	더○○○○	1
한○○○○	3	동○○○○	1
강○○○○	2	동○○○○	1
남○○○○	2	디○○○○	1
대○○○○	2	마○○○○	1
듀○○○○	2	미○○○○	1
디○○○○	2	미○○○○	1
리○○○○	2	미○○○○	1
모○○○○	2	미○○○○	1
미○○○○	2	믿○○○○	1
삼○○○○	2	삼○○○○	1
스○○○○	2	세○○○○	1
에○○○○	2	솔○○○○	1
에○○○○	2	스○○○○	1
엠○○○○	2	스○○○○	1
오○○○○	2	썬○○○○	1
오○○○○	2	아○○○○	1
온○○○○	2	아○○○○	1
와○○○○	2	애○○○○	1
외○○○○	2	어○○○○	1
이○○○○	2	에○○○○	1
이○○○○	2	에○○○○	1

회사명	신청자(명)	회사명	신청자(명)
엘○○○○	1	케○○○○	1
엘○○○○	1	케○○○○	1
외○○○○	1	코○○○○	1
우○○○○	1	큐○○○○	1
우○○○○	1	템○○○○	1
원○○○○	1	티○○○○	1
위○○○○	1	프○○○○	1
위○○○○	1	피○○○○	1
유○○○○	1	피○○○○	1
은○○○○	1	피○○○○	1
이○○○○	1	한○○○○	1
자○○○○	1	한○○○○	1
제○○○○	1	한○○○○	1
중○○○○	1	한○○○○	1
지○○○○	1	한○○○○	1
진○○○○	1	해○○○○	1
케○○○○	1	화○○○○	1
케○○○○	1	합 계 (195개사)	1,625

성일종 의원,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 대출 금리 더 내려야

- 리스크없는 보증서 100% 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 대출 보다 높은 구조로 은행만 배불려

-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의 시중은행 금리가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성일종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 ~ 최고 4.47%에 달하고,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 1.1% 고려할 때 4.42% ~ 5.57%에 이른다.
-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최저 3.36% ~ 최고 4.06%로 보증서담보대출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일종 의원은 “신보가 지급 보증을 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담보 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대출 보다 높은 현 구조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 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 ~ 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성 의원의 지적대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2018년 9월말 현재 신보가 시중은행에 신규 보증서를 발급한 규모가 8조 4,283억 원이고, 보증비율 95%~100%의 규모가 전체의 25%인 2조 2,286억 원인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원 여력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 충분

- 기금의 여유자금 계속 증가해 재정적인 여력 충분
- 반면 보증금은 다른 개인 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에 높은 보증료율 현상 해결필요
- 한국정책금융공사 보증금 보증료율 인하 위해 적극 노력해야

-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료 수익 중 중도금에 대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에 비해 손실률은 떨어지고 있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재정적 여력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의 종류별 손익’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의 수익은 지속되고, 손실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즉, 기금의 재정적 여력이 생긴 만큼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고, 특히 개인보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에 비해 중도금 보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인하된 것으로 분석돼 보증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주택경기 활성화 및 대위변제금액 감소 등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여유자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2016년과 2017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500억원을 전출하였다. 전출액을 차감 후에도 재정 운용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여유자금 운용액 및 일반회계전출액〉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여유자금 운용액	3,335,282	3,774,833	4,502,002	4,783,055	5,132,020
일반회계 전출액	-	-	-	200,000	50,000

-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주요 개인보증 보증 손실율을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 손실율은 106.4% 수준으로, 타 주요 개인보증 상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 주요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 보증과 구입자금 보증 그리고 중도금 보증을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 148.9%, 구입자금 314.4% 규모인 반면, 중도금은 10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 주요 개인보증 종류별 보증 손실율 현황>

(단위 :%)

구 분	200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중도금	164.0	91.2	150.2	186.9	163.0	19.9	4.6	4.6	106.4
전세자금	133.0	63.5	109.9	156.1	183.5	243.1	201.5	132.1	148.9
구입자금	521.2	14.1	40.7	4.7	29.5	32.2	30.9	11.9	314.4

주1) 보증 손실율=대위변제 발생액 ÷ (대위변제 회수금액+보증료 수익)

주2) 상기 대위변제 발생 및 회수금액은 각 연도에 발생 및 회수된 금액 기준

- 한편, 개인보증의 평균 보증료율을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료율이 타 보증의 보험료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각각 0.22%p, 0.2%p 평균 보증료율이 감소했으나, 중도금 보증의 경우 0.09%p에 그쳤다.

〈개인보증 종류별, 평균 보증료율〉

(단위 :%, %p)

구 분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3 (B)	차이 (B-A)
중도금	0.21	0.19	0.19	0.17	0.13	0.12	0.12	0.12	0.09
전세자금	0.31	0.30	0.30	0.23	0.17	0.16	0.12	0.09	0.22
구입자금	0.34	0.26	0.26	0.26	0.22	0.15	0.14	0.14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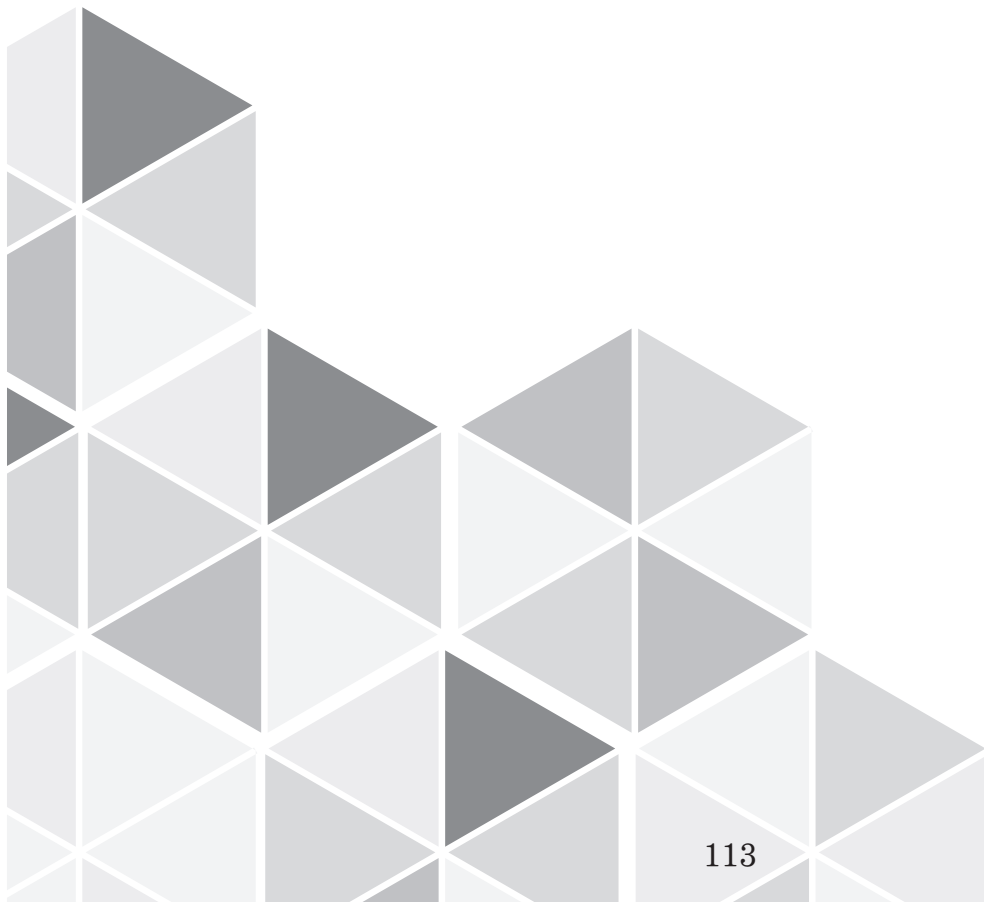
주1) 보증 손실율=대위변제 발생액÷(대위변제 회수금액+보증료 수익)

- 이에 대해 성일중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인하를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보증 중 중도금 보증의 경우 타 개인 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 정 감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일종**



주객이 전도된 자산관리공사
"설립목적에도 없는 개인 채무조정
사업이 주된 임무"
[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자산관리법)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제6조(설립)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다.(전문개정 2011.5.19)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요 업무 현황

주요사업			'18년 계획 (단위 :억 원)	'17년 실적 (단위 :억 원)
부실자산 인수·정리	가계부실채권 인수·정리	인수*	58,341 (3,581)	20,985 (725)
		회수	4,794	1,714
	기업구조조정 지원	인수	8,845	5,186
		회수	1,699	433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수입 금액** (부동산, 증권)		11,118	13,618
공공부동산개발	국·공유지 개발 투자		2,561	1,765
체납조세정리	체납정리		5,690	7,002
	국세체납 위탁징수		340	378

* 채권액 기준, ()는 매입액, 경과이자 제외
 **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조달 목표금액 반영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관 주요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17년) 주요 사업 실적 가운데 ‘**가계부실채권 인수**’가
2조 98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확인됨



□ 올해(18년) 사업 목표 中

- 금융소외자 지원으로 ‘가계부실채권 인수’에 2.8배(178%) 많은 5조 8,341억 원을 지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이은 국정과제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것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 명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시행으로 당초 신청자 접수기간 마감일(8.31) 기준 **5.5%**에 해당하는 **6.6만 명 만이 신청** 했는데, 재원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가?

또한, 대책 발표(17.11.29)시에 대상자를 **159만 명으로 발표** 한 것은 맞지만, 이후 지원 재단 출범(18.2.22)시 **119.1만 명으로 변경** 되었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지원대책회의(18.8.22)에서 **3~40만 명**으로 대상자를 변경 발표했는데, 집행기관으로써 대상자 수 변경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면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상자 159만 명**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을 **5.8조원**이라고 표기함.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서민금융법)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56조(설립)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한다.



오히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률(서민금융법)에 개인 채무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상시 기능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채무조정)' 아닌가?
- 법적근거도 부족한 사업을 주된 업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명확한 법적근거로 운영되고 신용회복위원회로 개인 채무조정 업무는 일원화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자산관리공사는 97년 IMF, 2003년 카드대란 등 굵직한 경제위기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왔고,

- 이후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조세정리 등 국가자산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적인 빚 탕감 공약**을 이행하고자 **법적근거가 부족함에도 개인 채무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어 기관의 성격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대부업, 정부 빚 탕감 정책에 반기? "참여 저조로 1,625명 사각지대 발생, 형평성 어긋나" [자산관리공사]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기준

원금 **1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대부업 참여 현황(18.08.14)

구분		회사수(개)	비중	신청자(명)	비중
협약 참여사	회원사	70	25.6%	2,954	63.5%
	비회원사	8	2.9%	71	1.5%
소 계		78	28.6%	3,025	65.1%
협약 미참여사	회원사	130	47.6%	1,380	29.7%
	비회원사	65	23.8%	245	5.3%
소 계		195	71.4%	1,625	34.9%
합 계		273	100.0%	4,650	100.0%

'**대부업권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지원 협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협약 대상 대부업체 **273개** 가운데 **28.6%** 에 해당하는 **78개 업체**
만이 **협약에 참여** 했는데,

-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195개** 업체(**71.4%**)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지원 **신청자가 1,625** 명에 달하는데,
- 이 분들은 채권 소유자가 지원대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각지대로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업체의 평균 부실채권 매입률(10%) 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하는
채권의 매각가액이 절반(2~3%)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참여하지 않은 대부업체만의 잘못인가?

안 그래도 법정최고이자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수익 악화로
대부업 등록도 탈퇴하고 불법사채시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 이러한 대부업체를 상대로 정부가 **원가의 1/3가격으로 달라** 고 하는 것은
칼 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 참여하지 않은 대부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인가? 무책임한 정부 아닌가?
- 종합국감 전까지 이번 대책에 따른 금융회사별 채권가격 대비 매입가액을
전수조사해서 의원실에 제출해주기 바람.

**대부업체 매입가격 현실화로 수익성 살려서
이자율 낮추게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도금 대출 보증 금리 인하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

□ 부동산 호황에 따른 여유자금 증가

주택금융공사 여유자금 단위:원, 연말 잔액기준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 지급 보증으로
출연금 증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개인보증 수익 발생 현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개인보증 종류별 연도별 보증료 수익]
(단위: 억원, %)

구분	200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비중)
전세자금	1,874	483	542	640	651	554	604	521	5,869	(62.0)
중도금	577	172	243	201	131	167	199	180	1,870	(19.7)
구입자금	1,154	50	50	59	67	78	95	101	1,654	(17.5)
건축·개량자금	48	3	7	4	1	2	4	5	74	(0.8)
임대보증금반환자금	2	1	0	0	0	0	0	0	4	(0.0)
합계	3,655	709	842	904	851	801	902	807	9,471	(100.0)

전체 수익 9,471억원 중 1,870억원(19.7%)이 보증료 수익을 발생

□ 개인보증 손익 분석 현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개인보증 종류별 연도별 보증 손익]
(단위: 억원, %)

구분	200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비중)
전세자금	△1,860	330	△91	△585	△943	△1,604	△1,431	△435	△6,619	(48.1)
중도금	△960	35	△311	△1,145	△705	1,098	922	559	△507	(3.7)
구입자금	△7,542	158	105	163	124	122	132	171	△6,567	(47.8)
건축·개량자금	△88	5	8	6	4	4	6	5	△50	(0.4)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1	△1	△1	△1	△2	△1	△1	0	△5	(0.0)
합계	△10,449	527	△290	△1,562	△1,521	△381	△372	300	△13,748	(100.0)

보증손익 = 보증료 수익 + 대위변제 회수금액 - 대위변제 발생액

개인 보증 전체 손실액 가운데, 500억원(3.7%) 수준

□ 개인보증 종류별 보증료율

[개인보증 종류별, 연도별 평균 보증료율]

(단위: %, %p)

구분	2017년도 말 잔액 비중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3 (b)	차이 (b-a)
전세자금	57.2	0.31	0.30	0.30	0.23	0.17	0.16	0.12	0.09	△0.22
중도금	36.2	0.21	0.19	0.19	0.17	0.13	0.12	0.12	0.12	△0.09
구입자금	6.5	0.34	0.26	0.26	0.25	0.22	0.15	0.14	0.14	△0.20

타 개인 보증 대비 매우 낮은 손실을
지속적인 여유자금 증가

중도금 보증료율 인하 검토 필요

금리인상 대비
보증서 대출 적정금리 필요
[신용보증기금]

□ 경제전문가들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 두 가지 지적

☞ **금리인상과 투자위축**

- 미 연준위 연간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에 도달** 해 금리인상 시사
 - 현재 한미 **금리 격차 0.75%**
- 현대경제연구소 '2018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요인
 - ☞ **금리인상(22%) 와 투자위축(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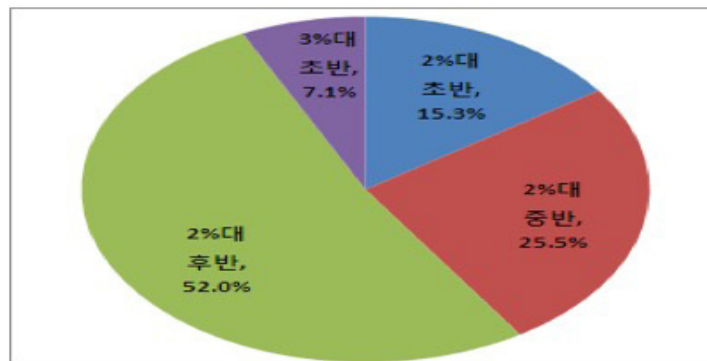
[국내 경제의 주요 위협요인 10%미만]

- ▲소비부진 (12.6%), ▲고용시장 개선세 미약 (11.5%), ▲가계부채(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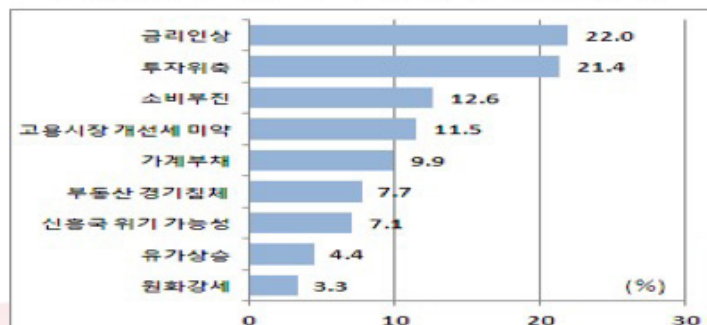
[국내 경제의 주요 위협요인 5% 미만]

- ▲유가상승 (4.4%), 원화강세 (3.3%)
 - ☞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상대적 덜 민감.

<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 2018년 하반기 국내 경제 위협요인 >



□ 미국 금리 인상해도 국내금리인상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분석 대응 필요

○ 한미간 금리 격차 확대 →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But) 과거에 비해 외환 건전성 개선 및 기초세력 양호
(=) 외국인 자금유출이 제한적인 가능성도 존재

- 한미간 금리 역전시기 (05년 8월~07년8월)
 → 총 **31.7조원** 외국인 주식 순매도
 → **12.1조원** 외국인 채권 순매수 발생

원화가치 9.2%절상

□ 고금리 시대 대안 필요함.

□ 은행의 대출금리 → **신용보증부대출의 평균금리 > 담보대출 금리**
신용보증부대출의 평균금리 < 신용대출 금리

- 보증서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 담보관리비용 등이 들어가지 않아 금리 낮아짐
- 신보에 지급하는 **보증료(1.1%) 감안**, 보증서담보대출 금리가 **지급보다 더 낮출 수 있는 여력** 있음

고금리 시대 중앙은행의 금리가 있을 경우 은행이 급격히 금리 인상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신용보증부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국내 대표은행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지방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





[보증서담보대출 금리현황]

(평균 3.74%, 보증비율별)

은행	보증비율별 금리					평균금리
	100%	90%	85%	80%	80%미만	
BNK경남은행	2.51	3.47	3.72	4.09	5.13	3.36
BNK부산은행	3.12	3.67	3.98	4.16	4.28	3.69
DGB대구은행	3.13	3.68	3.82	4.01	4.25	3.72
IBK기업은행	3.28	3.7	4.07	4.35	4.65	3.88
KB국민은행	3.54	3.81	4.12	4.54	5.06	3.99
KDB산업은행	3.58	3.32	3.32	3.38	5.26	3.39
KEB하나은행	3.35	3.63	3.79	4.18	4.33	3.67
NH농협은행	3.2	3.63	3.85	4.03	4.16	3.68
SH수협은행	3.47	3.83	4.09	4.4	4.12	4.06
광주은행	3.63	3.63	3.91	4.01	3.98	3.6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98	3.77	4	4.21	3.35	3.58
신한은행	3.24	3.64	3.77	4.06	4.23	3.65
우리은행	3.18	3.61	4	4.46	4.23	3.68
전북은행	3.59	3.82	4.49	4.65	5.35	4.21
제주은행	3.83	4.06	4.1	4.23	-	4.04
한국씨티은행	3.59	3.62	3.75	3.91		3.71

[중소기업 신용대출별 금리현황]

(평균 5.10%, 신용등급별)

은행	신용등급별 금리					평균금리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BNK경남은행	3.91	3.79	4.97	6.26	6.77	4.99
BNK부산은행	4.34	4.18	5.84	5.46	6.26	5.28
DGB대구은행	3.16	4.36	5.22	6.01	8.15	5.15
IBK기업은행	4.04	5.14	6.41	8.72	7.54	6.04
KB국민은행	3.32	3.85	5.73	10.19	7.57	5.17
KDB산업은행	3.3	4.07	4.29	6.76	9.85	4.1
KEB하나은행	3.52	4.37	5.07	7.06	8.14	5.05
NH농협은행	4.08	4.7	5.91	8.27	10.33	5.63
SH수협은행	4.33	4.41	5.52	9.73	13.25	5.84
광주은행	4.65	4.68	5.44	7	5.99	5.45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3.48	3.71	3.65	4.3	3.69
신한은행	3.39	3.74	4.8	7.42	9.62	4.52
우리은행	3.34	3.99	5.18	10.37	12.09	5.14
전북은행	5.08	5.4	7.11	11.07	10.91	6.44
제주은행	-	4.62	5.36	7.08	13.49	5.04
한국씨티은행	3.12	3.27	3.54	4.79	5.65	4.13

[중소기업물적담보대출 금리현황]

(평균 3.82%, 신용등급별)

은행	신용등급별 금리					평균금리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BNK경남은행	3.09	3.44	3.78	4.82	5.7	3.86
BNK부산은행	3.48	3.59	4.02	4.49	6.08	4.02
DGB대구은행	3.24	3.6	4.04	4.35	5.6	4.06
IBK기업은행	3.02	3.44	3.59	3.68	3.51	3.44
KB국민은행	3.25	3.41	3.61	5.06	5.2	3.68
KDB산업은행	2.78	3.26	3.38	3.56	4.14	3.32
KEB하나은행	3.6	3.57	3.82	4.29	4.73	3.85
NH농협은행	3.31	3.45	3.75	4.25	4.98	3.77
SH수협은행	3.69	4.07	4.16	4.89	5.88	4.11
광주은행	3.86	4.07	4.3	5.43	6.3	4.47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3.06	3.12	3.33	4.11	3.33
신한은행	3.33	3.55	3.9	4.65	5.13	3.72
우리은행	3.22	3.38	3.8	4.87	5.45	3.66
전북은행	3.73	4.12	4.27	4.27	4.2	4.11
제주은행	3.85	3.91	4.28	5.06	5.54	4.14
한국씨티은행	3.38	3.35	3.25	3.73	3.94	3.58

새로운 신용판별 Tool
도입 필요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 **보증가능여부 판단할 때 재무제표 중심으로 신용 파악**

<참고>
대표자 경력, 기업의 기술력, 거래처 신용도 등 고려
금융거래상황과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종합 신용등급으로 보증가능 여부 판단

□ 재무제표 전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



□ 통상 기업의 결산기는 12월



□ 결산기 경과 재무제표 작성

- 신보 및 금융기관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신용등급 산출
- 추가여신을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 통상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반영
- (경영상 변동 x) 한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 하지만, 해당기업이 회계연도 중 기업의 신용도에 긍정적이 요소 발생

☞ **신용평가에 반영 안됨**

- 신용도 긍정적 요소 예
 - 대규모 수출계약
 - 공공기관과 대규모 거래

Q1. 따라서, 기업자체의 신용평가등급 외에 기업 간 거래 성실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신용판별 Tool'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 **이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

☞ **보수적으로 서류평가만 해서 자금 보증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은행 방식**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외사례

☞ **Paydex** 라는 평가방식 있음

(거래처에 지불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점수를 산출)

[Paydex란?]
신용거래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에서 신용평가등급 외에 사업체가 거래처한테 지불하는 페이먼트를 얼마나 제때에 하는가에 따라 평점을 산출하는 방식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스몰 비즈니스의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크레딧 에이전시로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Dun & Bradstreet:D&B)'가 있고, D&B에서 공개하는 던스번호를 페이덱스(PAYDEX)번호라고 부른다
- DUNS No : 기업이 연방정부의 조달계약에 참여 또는 정부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D&B의 BUNS NUMBER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이를 위해 기업들은 D&B에 회원등록을 하고 재무상태 및 상거래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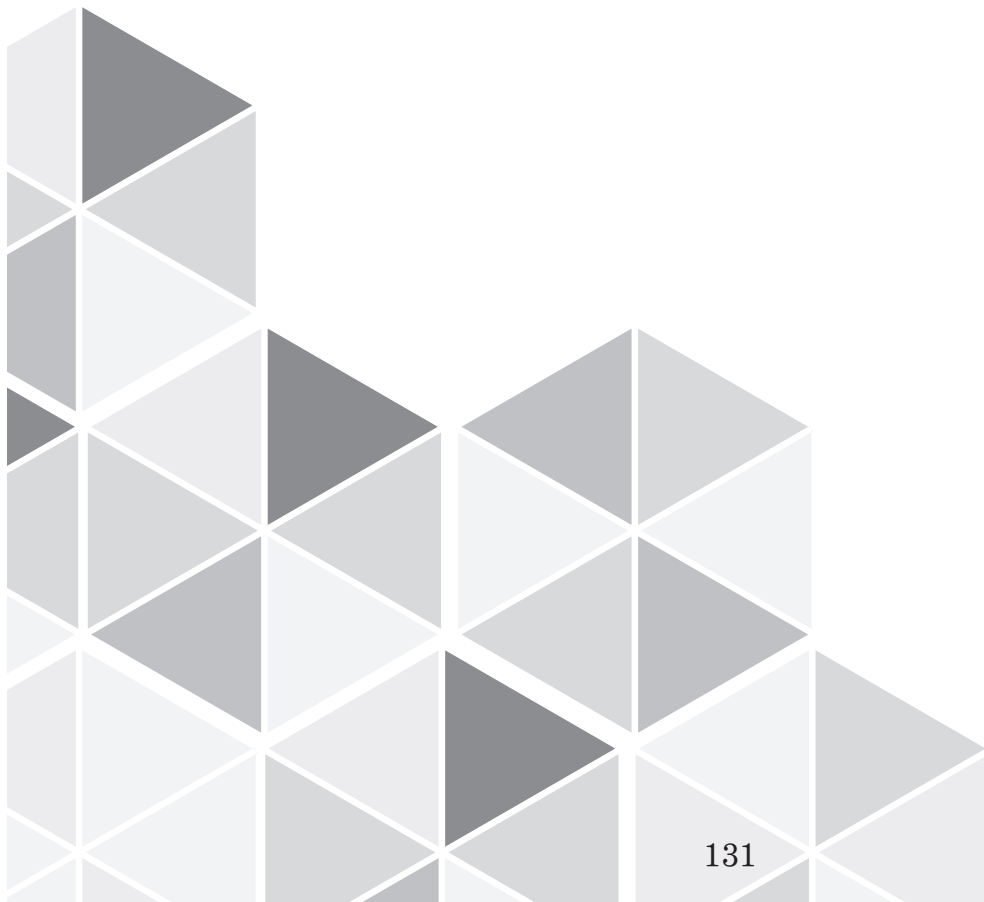
<한국형 Paydex 도입 필요>

- 1) **신용평가등급과 거래성실도**를 동시 측정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확보** 및 현금 대신 신용거래의 관행을 정착할 필요
- 2)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지표 취약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상거래의 성실도 등의 활용을 통한 보완이 필수
- 3) 신보는 **21만개 기업**의 재무 비재무정보 및 매입 매출처간 **거래 정보를 DB화해 관리**하는 국내 최대의 기업정보관리기관
- 4) 신보는 **빅데이터와 영업망을 활용**한다면 **한국형 Paydex 생태계를 조성**해 법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Q2.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대표언론자료



기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

‘장기소액연체 구제’ 유명무실

최재규기자 jqnote91@munhwa.com

대부업체 참여 고작 28.6%뿐
부실 채권 헐값 매입에 거부감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지원 협약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자 구제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부업권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지원 협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 협약을 진행 중인 대부업체 273곳 가운데 28.6%에 해당하는 78곳만이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일선 금융기관들과 채권 매각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 매각 대상 기관 중 대부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이들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대상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71.4%에 달하는 195개 업체로, 이들 업체가 보유 중인 채권에 대해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지원을 신청한 인원만 현재 1625명에 달한다. 이 중 한 업체에는 243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접수하기도 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의 평균 부실채권 매입 가격은 채무 원금의 약 10% 수준인 반면, 정부의 협약에 따라 캠프에서 제시하는 채권의 매각가액은 2~3%로 대부회사 채권 매입 가격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대부업체는 재산상의 손실 등을 우려해 협약 참여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이들 부실 채권을 지나치게 헐값에 매입하려 하고 있어 대부업체들이 협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성 의원은 “1명이라도 장기소액연체 신용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비롯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2018 국감]성일종 의원 “보증서담보 중기대출 금리 인하해야”...윤대희 “지적에 공감”

기사입력 2018.10.19 16:13:35 | 최종수정 2018.10.19 16:13:35 | 조계원 | Chokw@kukinews.com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보증서담보대출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의 시중은행 금리가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일종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 ~ 최고 4.47%에 달한다.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 1.1%를 고려할 때 4.42% ~ 5.57%에 수준이다.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최저 3.36% ~ 최고 4.06%로 보증서담보대출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신보가 지급 보증을 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담보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대출보다 높은 현 구조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 ~ 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국감 2018] 성일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인하해야"

"기금 여유자금 계속 증가해 재정적인 여력 충분"
중도금 보증 손실을 106.4%...타 개인보증 대비 낮아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 2018-10-19 17:52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성일종 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정부 기금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료 수익 중 중도금에 대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에 비해 손실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19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의 종류별 손익' 등의 자료에 따르면 중도금 보증의 수익은 지속되고 손실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활성화 및 대위변제금액 감소 등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여유자금은 2013년 3조3352억원에서 2017년 5

조132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과 2017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500억원을 전출했다. 성 의원은 "전출액 차감 후에도 재정 운용에는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재정적 여력이 생긴 만큼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고, 특히 개인보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에 비해 중도금 보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인하된 것으로 분석돼 보증료를 인하가 필요하다는 논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주요 개인보증 보증 손실율을 보면 중도금 보증 손실율은 106.4%로, 전세자금(148.9%), 구입자금(314.4%) 등 타 주요 개인보증 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보증의 평균 보증료율을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료율이 타 보증의 보험료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각각 0.22%p, 0.2%p 평균 보증료율이 감소했으나, 중도금 보증의 경우 0.09%p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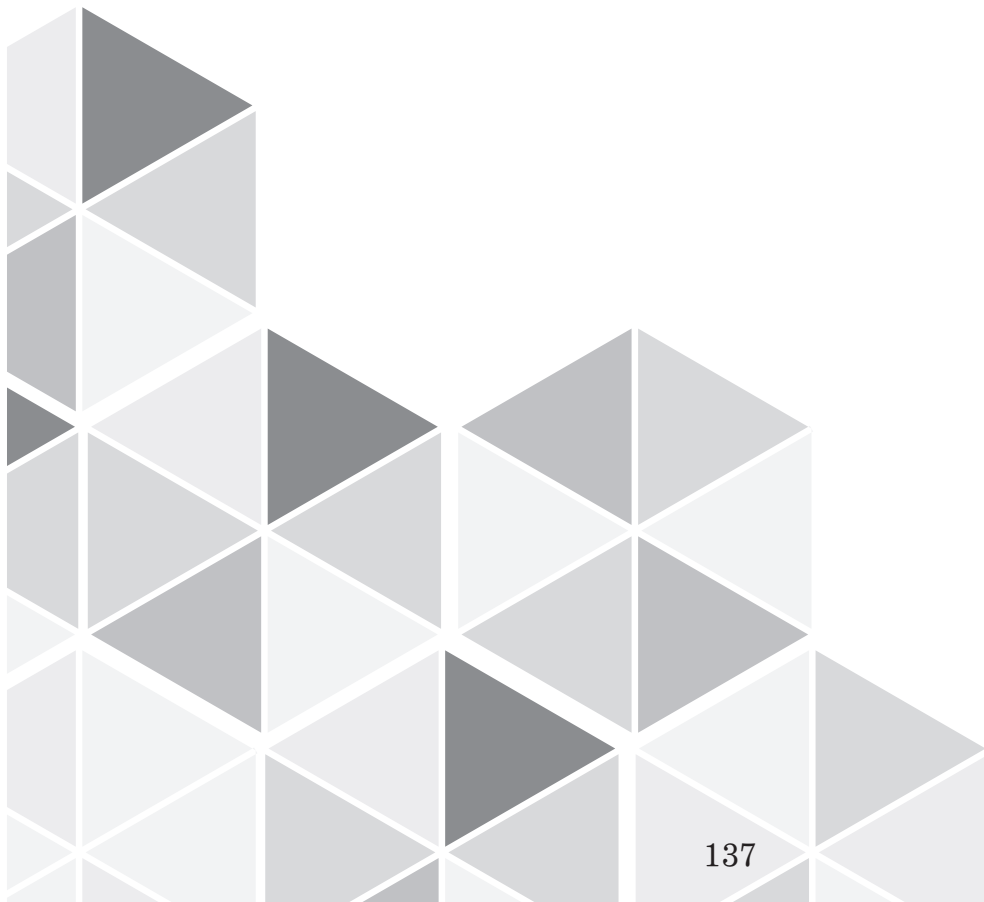
성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인하를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보증 중 중도금 보증의 경우 타 개인 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국정감사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공공기관 계획 없던 단기일자리 대규모 채용 나서

- 검토하지 않은 신규채용 300여명 연말 채용 계획 세워
- 단순 행정업무에 대규모 채용으로 고용 통계 착시
- 단기일자리 정책은 '악어의 눈물'...국민 호도하지 말아야

-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대책을 지시하면서, 각 공공기관들이 단기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단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며, 각 공공기관이 단기일자리를 늘리면 고용착시 현상도 일으킬 것으로 진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정에 없던 단기 일자리 채용 인원을 30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일자리 관련 금융 공공기관 회신 현황〉

구 분	최초 회신(명)	최종 회신(명)
예금보험공사	0	100
한국산업은행	0	110
중소기업은행	0	100
서민금융진흥원	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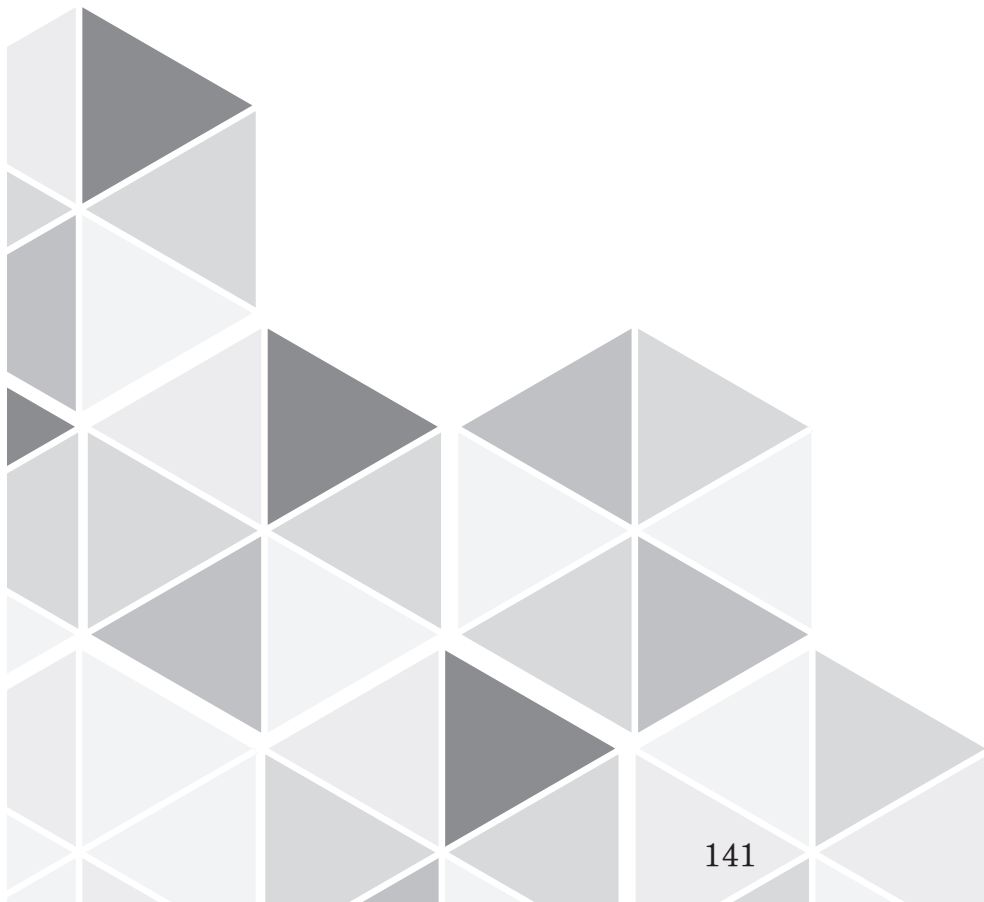
- 또한 단기 일자리 채용으로 하는 업무 역시 단순한 행정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전원 단기일자리 채용으로 기록물 정리, 자료수집 등 제한적 업무만 수행할 것으로 드러났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올 연말까지 43명의 인원이 증원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단기일자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지점에서 행정보조격으로 근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금융 공공기관 모두 최초 기획재정부 회신에 채용계획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검토요청에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단기 일자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통계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며 “계획에도 없던 단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인양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악어의 눈물’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질의서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일종**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업무
진흥원으로 일원화 필요
[서민금융진흥원]



□ 이계문 진흥원 원장 취임(18.10.5)

- 취임사 생략하고 현장(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애로사항 청취

서면취임사) “**취약계층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정과제인 **포용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포용금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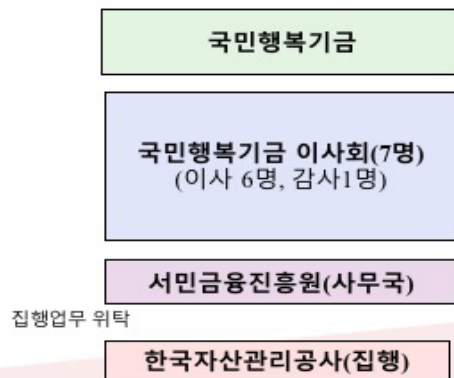
서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 아닌가?

- 그렇다면 **캠코(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입채권 채무조정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민행복기금 주체

'16.9.23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과 함께
캠코 보유 지분 전량(68.28%) 진흥원 양도

※ 기획·이사회·주주총회 등 **운영 사무는 진흥원** 내 별도조직인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이 담당하고, **사업 실행과 회계·자금·전산·계약** 등은 **캠코(자산관리자)에 위탁하여 운영**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며 캠코가 위탁·운영했던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16년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 하면서 **진흥원 자회사로 주체가 명확하게 전환** 되었는데,

- 여전히 **캠코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이유** 가 무엇인가?

사유) 진흥원 설립 당시 조직·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기존과 같이
 캠코에 자산관리 업무를 지속 위탁

□ 캠프의 설립근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자산관리법)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제6조(설립)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다.(전문개정 2011.5.19)

잘아시겠지만 진흥원이 위탁한 **캠프**의 경우 설립법률 어디에도 **매입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 어떠한 근거로 매입채권 채무조정을 위탁했는가?

근거: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3.3.25
- 기존 위탁업무 계속 위탁

- 매입채권 채무조정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금융위 대책에 따라 위탁한 관행을 따른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 캠프코의 위탁업무

국민행복기금 재원 이 활용되는 업무 **전부가 캠프코에 위탁 운영**

업무	재원	직접운영	위탁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운영	○ (캠프코)
소액대출			
취업지원			
매입채권 채무조정			

매입채권 뿐만 아니라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을 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 ▲**소액대출** ▲**취업지원** 업무도 **캠프코에 위탁 운영** 하고 있는데,

- 캠프코는 현재 기업구조조정 등 본연의 업무 보다
진흥원에서 위탁받은 업무로 인해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고,
- 특히 매입채권 채무조정 수익(연 1,200억원 상당)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
- **이 구조가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생각하는가?

□ 중복 업무 발생

(진흥원 워크숍 18.10.19)

원장 “서민·취약계층이 소득이 창출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알선,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

(진흥원 역할) 실직, 폐업, 소득 부족 문제로 구직을 원하는 **취약계층 취업연계 등 지원**

특히 ‘**취업지원**’업무의 경우

진흥원과 캠큰이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 중복업무 를 하고 있음

<제언>

☞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진흥원의 자회사인데 **진흥원은 사업계획 예산 등 총괄기획 기능만 수행** 하고,

- 채무조정, 바뀐드림론, 소액대출, 취업지원 등 **실제 집행업무는 캠큰** 가 국민행복기금의 자산관리자로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인데,
- **캠큰** 는 **부실채권을 매입 정리하는 기관** 이지 서민금융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서민금융 관리에 대한 비효율** 이 발생함

☞ 캠큰의 국민행복기금 지분을 진흥원으로 이관한 **근본 취지** 에 맞게 캠큰가 수행하는 **국민행복기금 업무 전체를 진흥원** 으로 **일원화**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 수요자인 **서민** 들 입장에서 **종합적인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함

국민행복기금 관련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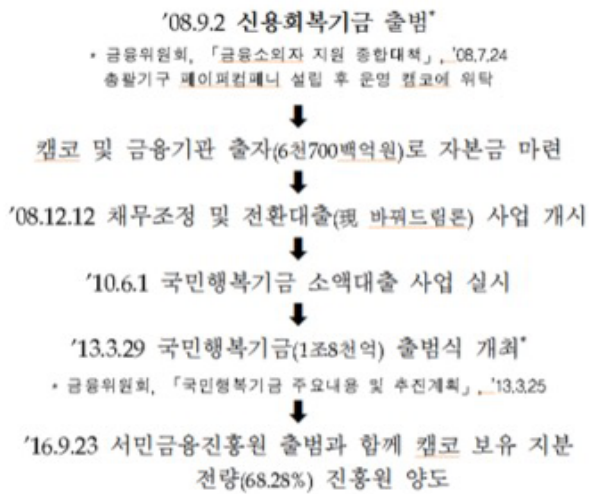
(다만) 매입채권 채무조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캠프에 위탁이 불가피**

매입채권 채무조정은 캠프 역시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심회사 같은 매입채권 채무조정 업무는 폐지** 하고,

- 개인 채무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채무조정 울타리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고 봄.

1. 국민행복기금 연혁
2. 이사회 및 주주기관 구성 현황

- '08.9월 신용회복기금으로 설립되어, '13.3.23일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전환 출범
- 국민행복기금 연혁



- 현재 이사회는 7명의 이사 (이사 6명, 감사1명)으로 구성
- 주주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62.28%) 과 금융기관 20개사 등 총 21개 주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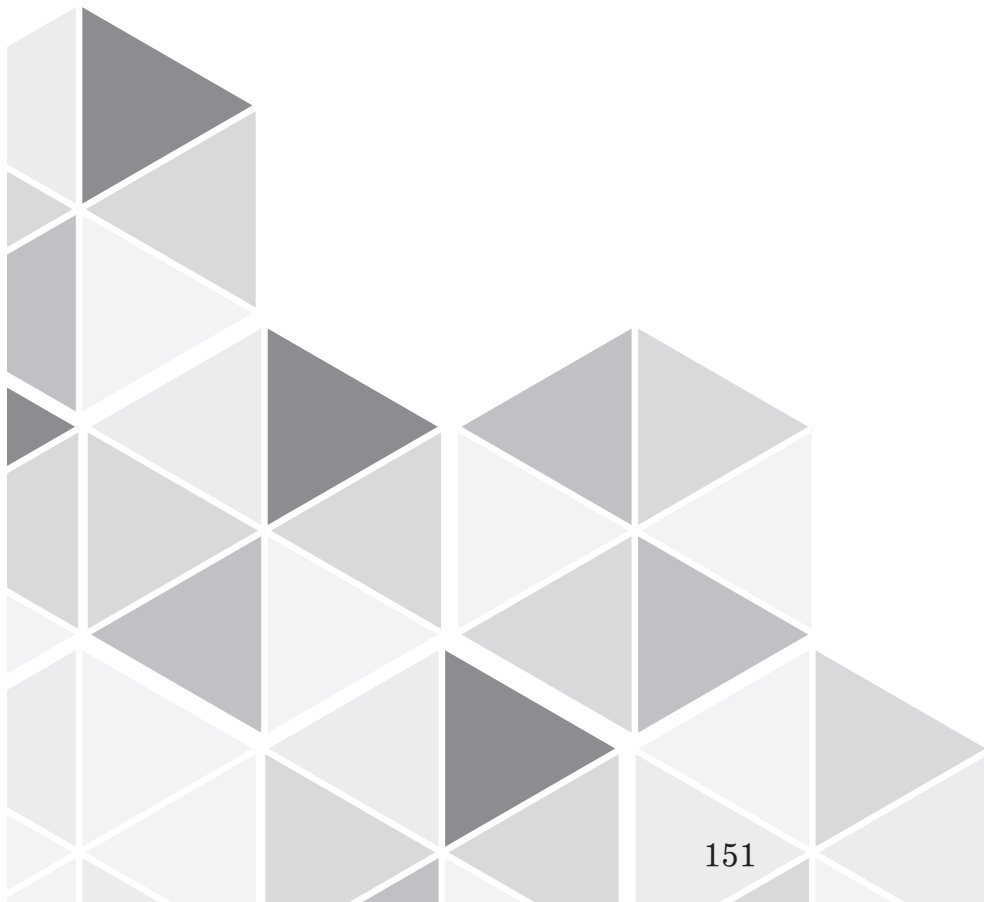
※ 기획·이사회·주주총회 등 운영 사무는 진흥원 내 별도조직인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이 담당하고, 사업 실행과 회계·자금·전산·계약 등은 캠코(자산관리자)에 위탁하여 운영

주주 번호	주주명	주식수	비율
1	서민금융진흥원	500,000주	68.28%
2	주식회사 경남은행	3,207주	0.44%
3	주식회사 광주은행	2,872주	0.39%
4	주식회사 국민은행	18,353주	2.51%
5	기업은행	13,539주	1.85%
6	농협은행	11,353주	1.55%
7	주식회사 대구은행	5,801주	0.79%
8	주식회사 부산은행	4,700주	0.64%
9	한국산업은행	34,066주	4.65%
10	수협은행/	2,372주	0.32%

주주 번호	주주명	주식수	비율
11	주식회사 신한은행	33,680주	4.60%
1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2,094주	0.29%
13	주식회사 하나은행	60,105주	8.20%
14	주식회사 우리은행	28,758주	3.93%
15	주식회사 전북은행	1,776주	0.24%
16	주식회사 제주은행	1,515주	0.21%
17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749주	0.10%
18	유안타 증권 주식회사	2,702주	0.37%
19	메리츠종합금융 주식회사	79주	0.01%
2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2,389주	0.33%
2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218주	0.30%
합계		732,328주	100.00%



대표언론기사



"금융공공기관 4곳, 계획없던 단기일자리 300여명 채용"

기사입력 2018/10/22 11:11 송고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024110] 등 금융공공기관이 연말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300여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산은과 예보, 기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개 금융공공기관은 연말에 314명을 단기 채용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산은 110명, 예보 100명, 기은 100명, 진흥원 4명이다.

성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 모두 최초 기획재정부 회신에 채용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거듭된 검토 요청에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일자리는 단순 행정 업무에 불과하고 고용 통계 착시 현상만 만들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2 11:11 송고